



CONTENTS

- 04 • 권두언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장영석
- 06 • 특집 |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대중국 교류 활성화와 과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대중국 교류협력 추진 실태와 전망 | 이종민
한·중 FTA 추진과 충남도의 경제통상 전략 | 양평섭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 성과와 과제 | 박경철
- 24 • 충남논단
충남의 생물다양성 보전제도 도입방안 고찰 | 정종관
충청남도 상수도 정책의 현황과 전환방향 | 김은경
- 44 • 충남 마을 기행
반갑고 재미있게 서천숲 체험마을 | 정봉희
- 50 • 열린마당
충남 로컬푸드 식당이 떴다 | 박래휘
- 55 • 해외리포트
북유럽의 시민사회: 사회문제, 네트워크, 독립성 | 이관통
- 61 • 상생+갈등
금강하구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언 | 허재영
‘암 마을’이라고 불리는 보령 갯배마을 이야기 | 신수연
- 78 • 오피니언
충남 in, 여성人 | 안정선
식량안보와 전통주 | 정대영
- 82 • 충남 소식
- 85 • 연구원 소식
- 87 • 충남 문화유산
논산 백일한종택



장영석 | 성공회대학 중어중국학과 교수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환황해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심이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의 동단이자,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환황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환황해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 환황해의 위험 요소를 억제하고 기회의 요소를 발전시키면서 안정·평화·번영의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가야 하지만, 국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 같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주목되는 한·중 관계

한국에서 '환황해'의 개념이 대중적으로 처음 제시되었던 것은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다. 당시 김영삼 후보는 만약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남·북한, 중국, 홍콩을 포함하는 '황해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 후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으로 그 개념을 구체화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환황해권의 발전 문제를 '동북아 공동체' 개념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간 '동북아 공동체' 발전 구상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남한의 북한에 대한 5·24조치 등 일련의 사건들로 남·북한 관계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있다. 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센카쿠 또는 댜오다오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한·일 및 중·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어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 양국 관계의 발전이 돋보인다. 2014년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시 한·중 양국은 '2014년 한·중 인문 교류 공동위원회 협력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인문적 유대의 강화 프로젝트는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시 한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서 한·중 관계가 대단히 공고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한국으로 하여금 한·중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일본과 북한을 견인해 나가는 전략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지만,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의 선택 폭은 결코 크지 않다. 결국 한국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는 동시에 한·중 관계도 발전시켜나가기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중국의 동북지역 및 북 황해권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 한국은 중국의 동북지역 및 북 황해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4년 5월 21일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과 중국의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 사이에 체결된 천연가스 협력 프로젝트이다.

앞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천연가스가 중국의 동북지역(중국 동북 3성, 베이징, 산둥반도)에 유럽 공급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중국에 공급될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한국으로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 북한을 거쳐 간접적으로 남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둘째, '넓은 동북 공업 기지의 전면적 진흥(東北老工業基地全面振興)' 계획이다. 최근 중국은 랴오둥(遼東)반도의 다롄(大連)시와 산둥(山東)반도의 옌타이(煙台)시 사이의 123km를 해저 고속철도 터널로 연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다롄, 단둥(丹東),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칭다오(靑島), 옌타이를 잇는 중국 동북지역, 북 환황해권의 거대한 경제 벨트가 형성될 것이다.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선택

러시아 천연가스의 한반도 연결 문제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이 중국 동북지역, 북 황해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전략이 동시에 요구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인천, 경기, 충남, 전남북, 부산 등 한국 서남해안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고려한 거시적인 전략을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상호 과다한 중복 경쟁을 피하고, 경쟁 우위의 요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앙 정부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 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남·북한 관계가 호전된다는 전망하에서 북한의 서해안 벨트 개발까지 고려한 '담대한 전략'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대중국 교류협력 추진 실태와 전망

이종민 | 충청남도 상해사무소 소장

이번 충남도 상해사무소 이종민 소장(사진)의 원고는 중국 현지지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다. <편집자 주>

▲ 충남 상해사무소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충남 상해사무소는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국제통상과 소속의 중국 사업소이다. 현재 충남도에 파견한 주재관 2명과 중국 현지직원 4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소장은 외부 민간 통상 전문가에서 선발된 계약직 공무원이고, 부소장은 도청 국제통상과 중국팀에서 근무했던 행정직 공무원이다. 중국 직원 4명 중 2명은 충남 소재 대학을 졸업한 자로 뽑았다.

업무분장은 1팀과 2팀으로 나누어, 1팀은 도내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투자정보 수집 등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2팀은 관광객 유치, 민간 교류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 충남도 상해사무소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나?

충남도는 15년 전인, 1999년 12월 28일 도내 업체의 대(對)중국 수출 증대를 위해 상하이에

현 '충남 상해사무소'의 전신인 '충남 상해무역관'을 개관하였다. 상해무역관 설립에는 민선 자치단체장 취임 후 지방자치 강화 정책과 한중 수교 후 양국 간 통상의 비약적 증대라는 2가지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무역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설립 초기에는 수출무역 지원에 특화된 조직이었으며, 2009년에는 중국 서부 대개발이라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지자체 사무소로는 최초로 중국 서부의 허브인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 무역관 분소를 개설하여 통상업무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3년 1월 '상해무역관'은 '상해사무소'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재편을 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명칭 변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기능 다각화'라는 원칙에서 쓰촨성 분소와 상해무역관을 통합하여 '충남 상해사무소'로 확대 개편하고, 통상 지원 기능에 관광객 유치, 유학생 유치, 민간 교류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명실상부한 충남의 해외공관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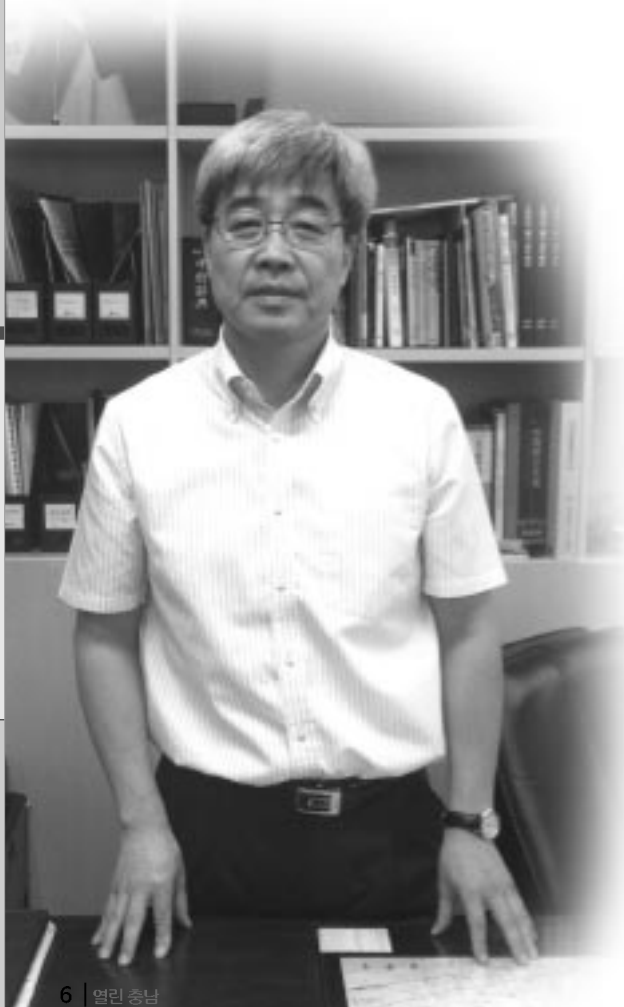
▲ 상하이에는 우리나라 타 지자체 사무소도 몇 곳 있다고 하는데 이들 사무소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한다면..

우리나라 지자체는 중국 각지, 즉 베이징, 상하이, 난징, 칭다오, 선양 등에 1~2개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충남을 비롯해 부산, 대구, 경기, 경남, 전남, 전북까지 모두 7개 지자체가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대개 지자체 사무소의 주요 활동은 조금씩 다르며, 각 지자체의 특성과 요구에 기초하여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사무소는 경기도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밀집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업무에 특화된 활동을 한다. 반면 수출업체가 적은 전남, 전북 사무소는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기간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지자체 사무소가 자기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소속 지자체의 대중국 사업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 특히 상하이에 지자체 사무소가 많이 개설된 이유는?

대부분의 지자체 사무소가 통상지원 업무를 주로 하는데 상하이가 바로 중국 통상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중국 1인당 GDP가 6천7백 불 수준인데 상하이는 그 2배가 넘는 1만5천 불 가량. 상하이를 중심으로 장쑤성, 저장성을 포함하는 장강 삼각주 경제권은 1억5천만 인구에, 중국 GDP의 20%, 전체교역의 34%, 외자유치의 39%를 차지한다.(자료: 중국통계국 2013년 통계연감)



상하이항에서 상품을 통관하여 대리상, 소매상을 거쳐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하이에는 모든 면에서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통하면 중국 전체에서 통한다."라는 말이 있다. 세계 모든 브랜드의 테스트 마켓이자 각축장으로, 상하이는 명실상부한 중국 경제수도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개가 넘는 지자체 사무소가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 상해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충남도 기업의 중국진출이나 상품판매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의 구매로 되기까지 마케팅이 필요한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것이 쉽지 않다. 많은 돈을 들여 미디어 광고를 할 수 없으니, 우수한 품질의 제품일지라도 소비자에게 알리고 구매자를 만날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거다.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충남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 프로세스에서 상해사무소는 도내 기업의 제품을 알리고 그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바이어를 찾아 거래를 알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요컨대 도내 업체를 대행하여 직접 혹은 업체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수출마케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지원 톨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 내 전시회에 도내 기업을 대행하여 참여해 제품을 홍보하고 관심 바이어를 찾는다. 이런 전시회에 일 년에 2~3회 참여한다. 둘째, '무역사절단'이라고 부르는 1:1 상담회를 개최한다. 도내 10개 내외 기업인이 중국으로 출장 와서 사전에 섭외된 관심 바이어와 심도 있게 상담하는 비즈니스 행사다. 무역사절단은 1년 2회, 1회 당 보통 3개 도시에서 순회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 도내 업체는 평균 15~25개 바이어와 상담을 한다. 셋째, '지사화 사업'이다. 출장 서비스부터 바이어 발굴까지, 상해사무소 직원이 도내 기업의 중국 현지지사 직원으로 역할을 하는 것. 현재 직원 1인당 도내 업체 3개를 책임지고 있으며, 지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은 업체당 최대 1년으로 한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비슷한 역할로 보이는데 기능이 중복되지 않나?

산업통상부 산하 코트라의 기능 중 일부를 상해사무소가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 지자체 해외사무소 폐지론을 제기하기도, 그러나 저는 2가지 이유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첫째, 우선 공공기관도 상호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출 마케팅 지원이라는 공공 서비스 시장에서 공공기관인 코트라와 충남도 상해사무소의 경쟁은 고객인 기업에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관료화를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다. 실제 2년 전부터 충남도는 동일

한 사업을 코트라에 일부 위탁주고 또 다른 일부는 충남 상해사무소에 주어 상호 경쟁시키고 있는데 고객인 기업의 만족도는 더 향상되고 있다.

둘째, 중국은 관의 권한과 위상이 높기 때문에 충남도 상해사무소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기업 마케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충남도 상해사무소가 소개하는 도내 제품은 바이어에게 더 많은 공신력을 줄 뿐 아니라, 충남도와 우호관계인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정부의 다양한 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작년 도내 모 식품업체가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애를 먹고 있었는데, 상해사무소가 채무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지역 관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결과 미수금을 회수하게 되었다. 상해사무소는 중국 사회의 이런 특성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다. 물론 중국은 시장원리가 작동되는 사회이지만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미묘한 관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 최근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나?

중국인이 주로 찾는 지역은 서울과 제주도로 관광상품이 다양하고 여행사가 많아 가격이 저렴한 반면 기타 지역은 낮은 인지도와 홍보 미흡 등으로 모객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그리고 숙박시설, 식당, 쇼핑시설 등 관광 인프라도 부족한 편이다.

상해사무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인에게 아직 낮은 충남 관광지를 알리기 위하여 충남도 교류지역인 상하이,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에서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를 초청하여 충남 관광설명회를, 올해는 부자 도시 저장성 항저우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 지난 3월 충남·전북·전남 3개 상하이 소재 지자체 사무소가 연합하여 '한국 서해안 관광벨트(가칭)'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중국 화동지역 여행사와 여행전문 잡지사 등 총 14개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주요 관광지 팸투어를 진행하였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서해안 주요 관광지를 TV 여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중국 31개 지역 방송국을 통해 방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 모집의 주체는 현지 여행사라는 인식하에 상호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현재 건설 중인 대신항 여객터미널을 이용한 크루즈 항로 개설, 청주공항을 활용하고 서울과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 등 중국 관광객 충남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아쉬운 점은?

브랜드 파워가 없는 중소기업 제품을 중국시장에 진입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중국 유통상, 대리상은 인지도 없는 제품을 선뜻 취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시장의 양면성, 즉 '시장 규모가 크고 또 그만큼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세계 모든 브랜드가 경쟁하므로 한국에서 통하지 않은 제품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통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이 큰 만큼 다양한 소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 없는 중소기업 제품도 파고들 수 있는 틈새는 분명히 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을 너무 쉽게 보고, 준비 없이 문을 두드린 후 또 너무 쉽게 포기하고 철수하는 것이다. 전시회 한두 번 참여한 후 성과가 없다고 아예 포기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 한번 참여한 전시회에서 "진성 바이어 하나 못 만났으니 괜히 출장비만 날렸다"고 불평하는 업체도 보았다. 수출 시장 개척에는 내수시장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목표 시장'과 '가격전략'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품질 차이를 별도로 한다면, '국가 브랜드'로 인해 한국 제품은 중국 제품에 비해 30~40%를 더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 제품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제품보다는 30~40%가 저렴해야 하며, 중국산보다 두 배 이상 비싸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쉽다. 경쟁사 제품 대비 내 제품의 품질이 어느 수준이니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팔릴 수 있는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회 혹은 전시회에 참여 전후 며칠 더 현지에서 머물며 꼼꼼하게 시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협상 테크닉과 관련하여 중국 바이어의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을 조언하고 싶다.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들은 내 물건을 현금 주고 지금 사갈 사람을 찾으나, 중국 바이어들은 장기적으로 합작할 파트너를 찾는 경향이 있다. 단발성으로 물건만 내게 팔고 끝낼 게 아니라 마케팅 비용 지원, 재고 관리, 홍보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로 합작하여 중국 내수시장을 함께 개척하자는 바이어도 많다.

이는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고 중국 상관행, 유통시스템의 복잡성, 리스크 헤지 등 중국 대리상의 특수성도 있다. 또한 수천 년 역사에서 축적된 중국 상인들의 노련한 협상 테크닉으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물건을 팔려는 수출자는 중국 대리상의 이런 요구에 당황해하거나 단칼에 거절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룰렛(중장기) 베이스로 대응할 때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 향후 중국 시장 트렌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경제성장의 삼두마차라는 투자, 소비, 수출에서 중국은 지난 30년간 투자와 수출을 동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 이후 소비가 주요 동력이 되는 성장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중국처럼 큰 나라가 수출과 투자를 성장 동력으로 하는 것은 세계경제에 있어서나 중국경제에 있어서 더

이상 받아들여 질 수 없다. 세계은행은 중국 GDP 대비 소비 비중을 2013년 48%에서 2020년에는 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들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이 감소하는 것은 이런 변화 - 내수 소비시장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출 품목은 기업 간 거래인 가공무역에 기초한 부품, 중간재가 주종이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순수 완제품은 10% 이하이다.(자료: KITA 2013년 한국무역통계) 우리의 수출 전략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다.

▲ 끝으로 이런 중국 경제 환경변화에 충남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한다면?

내수 소비시장 확대라는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특히 소비재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큰 블루오션이다. 소비재 시장에서 수입품 비중은 4% 미만인데 불과하므로 우리가 파고들 여지가 넓다. 인기 있는 아이템은 식품, 화장품, 의류, 패션, 생활용품 등이며, 한류는 여기에 한층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산업구조 조정과 도시화 확대는 거대한 새 수요를 만들고 있다. 시진핑 정부 출범 후 본격화된 산업의 질 고도화에 수반되는 업그레이드 수요와 도시화 확대에 생기는 건축자재, IT시스템, 환경분야 제품 시장이 유망하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놓쳐서는 안된다. 2013년 중국 전자상거래(B2B와 B2C) 규모는 1조6천억 불(1,630조 원)로 42조 원 규모인 한국 시장의 40배나 된다. 온라인 쇼핑(B2C) 판매액은 전체 소매시장(온/오프라인 포함)의 8%를 점유하는데 14% 가량인 한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성장 여력이 크다.(자료: 중국 전자상거래연구센터, 2013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데이터 연구보고서) 온라인 쇼핑물에 직접 입점하든 혹은 밴드사를 통해 간접 입점하든 자사의 여건과 제품의 특성에 맞춰 중국 온라인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국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수천 년의 역사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못 살았던 기간은 불과 지난 40년 정도뿐. 이미 GDP 규모로는 한국의 7배가 넘는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은 맹렬한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이웃한 이 큰 나라와 지혜롭게 공존하며 어떻게 상호 이익을 추구할지... 이 길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한중FTA 추진과 충남도의 경제통상 전략

글 · 양평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소장

한중 FTA의 추진 과정

한·중 FTA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에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후로부터 10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과정에는 2년여에 걸친 민간공동연구와 3년 반에 걸친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쳤다. 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도 2년여에 걸쳐 민감 품목의 처리 방식과 보호수준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정부 간 사전협의를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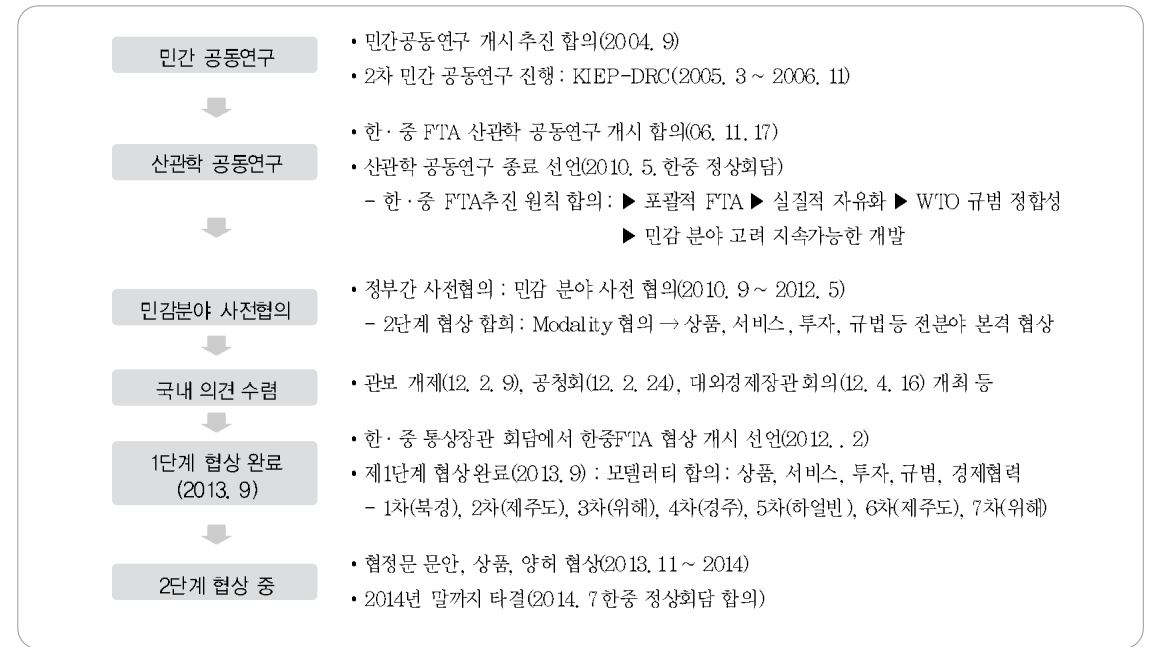
정부 간 사전협의 과정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1단계 협상에서 개방 수준, 포괄 범위 및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방식 등을 포함하는 협상의 기본 틀인 모델리티(modality)를 합의하였고, 2단계 협상에서는 합의된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협정문안 및 구체적 상품 양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6월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FTA 협상이 탄력을 받았다. 2013년 9월 초 개최된 7차 협상에서 협상의 기본 방침이라 할 수 있는 모델리티(Modelity)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러한 기본합의 따라 2013년 11월 이후 한중FTA 협상은 2단계에 접어들었고, 현재 12차 까지 협상이 진행되었고, 양국 정상은 연내 타결 합의에 따라 협상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한중 FTA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점 사항 등을 중심으로 충남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중 FTA 1단계 협상의 주요 합의 내용

2013년 9월 초 개최된 7차 협상에서 제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분야,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분야, △경제협력 분야의 모델리티(Modelity,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하였다.¹⁾

1)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 1단계 협상 결과(2013), pp. 2~4.

〈그림 1〉 한중 FTA 추진과정



먼저, 상품 분야에서는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 수 기준 90%, 2012년도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하였고, 추후 협상 과정에서 동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하였으며,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 및 기술표준(TBT)과 관련된 협상 원칙에 합의하였다.

둘째,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하였다. 특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정 및 기존 투자협정(BIT)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규범 분야에서는 지재권 보호 강화, 경쟁분야의 투명성 제고 및 당국 간 협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환경보호 의무 및 환경협력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넷째,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협력(에너지·자원, 철강, 중소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농수산물협력(식량안보, 농수산물투자, 기술·정보 교환, 산림분야, 식품 안전 및 위원회 설치 등)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하였다.

1단계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도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에 합의하였다. 특히, 상품분야 모델리타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한 것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중국이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투명성, 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효과이외에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한중FTA 2단계 협상의 과제

중국의 FTA 추진 전략에 있어 한·중 FTA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제1단계 모델리타 협상에서는 한·중 FTA는 민감분야를 보호하면서 포괄적이고도, 그동안 중국이 추진해 온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단계 협상에서는 합의된 모델리타를 기초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의 협정문(text)과 시장개방 양허 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 중이다. 한·중 FTA 추진에 있어 극복해야 할 이점이 많아 현재 진행 중인 제 2단계 협상도 수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중 FTA가 한·중 경제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양국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상호 민감 분야를 충분히 고려하되 양국 간 교역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FTA를 추진해야 한다. 한·중 FTA는 변하고 있는 한중 간 분업구조와 국제통상환경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고, 한·중 교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기제이다. 한·중 FTA 추진에 있어 각자의 민감 분야 보호만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실익이 없는 FTA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감 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양국 간 교역 확대, 특히 우리의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세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상품 분야의 중국에 대한 관세인하 협상에 있어 한·중 간 교역구조의 특성,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 중국의 수입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간 분업구조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77.5%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분야에서 즉시 관세철폐 또는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 구조를 점차 내수용 수출 중심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

2) 2012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수입 중 내수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33.7%로 대만의 27.4%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일본(51.7%), 미국(66.7%), 독일(77.9%)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1〉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상품 구조

(단위: %)

가공단계		대중국 수출상품 구성				일반무역 비중 (2012년)
		2006	2010	2011	2012	
일차상품		0.5	0.5	0.7	0.6	82.8
중간재	소 계	77.9	75.5	75.9	77.5	33.7
	산업용 원자재	32.8	30.2	30.2	29.0	52.3
	부품	39.5	41.1	39.3	42.8	22.3
	연료 및 윤활유	5.6	4.2	6.5	5.7	24.1
최종재	소 계	21.5	23.6	23.4	21.9	29.5
	자본재	18.0	21.1	20.0	18.6	25.2
	소비재	3.5	2.5	3.4	3.3	53.4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수출입 (DB: 중국해관 통계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둘째,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경쟁이 심한 제품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를 통해 중국과 대만간의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한 제품의 관세인하를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전환효과(switching effect)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 분야 협상에 있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일본, 대만 3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품목, △한국과 일본 간에 경쟁이 치열한 품목, △한국과 대만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품목, △한국이 절대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 군에 대해 즉시관세 철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자분야에서 최근 제18기 3중전회의 결정 사항과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험의 내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투자 분야 개방방식에 있어 상하이 자유무역 실험구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전 내국민 대우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투자 분야 협상에서 네거티브 제도의 도입 등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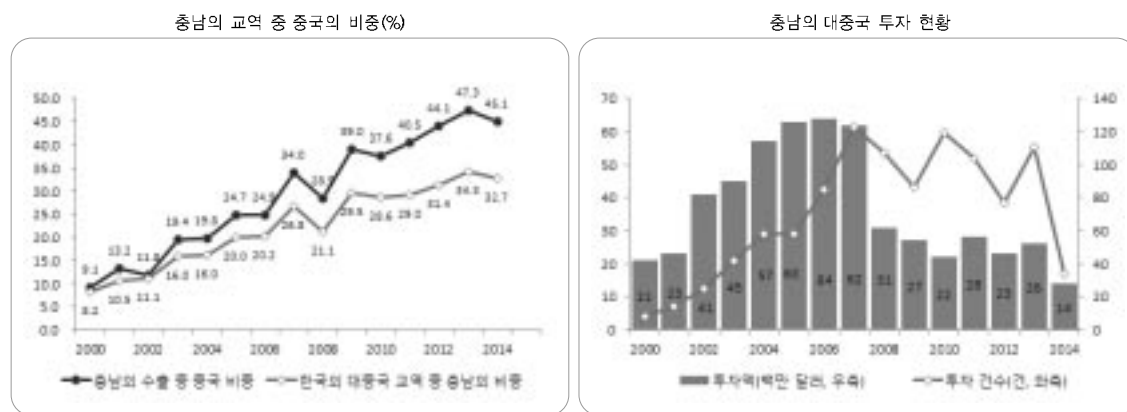
넷째,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세적인 입장의 협상분야이고, 서비스 산업은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서비스 시장을 보다 개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홍콩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와 대만과의 ECFA 조기수확프로그램(EHP)을 통해 서비스 분야를 WTO 개방 수준보다 높게 개방하고 있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에서는 6대 부문 18개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고, 투자자 자격요구, 지분 제한, 경영범위 제한 등의 규제조치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한중FTA 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의 CEPA, ECFA, 그리고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개방 내용을 감안한 협상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중 FTA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내 경제통합 논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한·중 FTA는 양자간 FTA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대(RCEP) 등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핵심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의 대중국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

중국은 충청남도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전체 교역의 34.3%를 차지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1%에 달한다. 더불어 중국은 충남기업의 최대 투자 대상국가로서 2014년 6월 말 현재 총 641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투자액은 11억 1,700여만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한·중 FTA는 충청남도의 대중국 통상전략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의 하나이다.

〈그림 2〉 충청남도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2014년은 실적 중 무역은 1~7월, 투자는 1~6월 실적임)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석유화학,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충청남도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의 기술력 향상, 국내 생산시설 확대, 한국기업의 중국내 생산 확대와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대한민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섬유 및 의류, 비철금속 분야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대한민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에 따른 단기적인 효과와 영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표 2〉 한·중 FTA가 충남의 대중국 주요 교역에 미칠 업종별 영향

산업	관세율		한중FTA의 효과	충남의 대중국 수출입 (2013년, 억불)	
	한국	중국		수출	수입
전기전자	5.4%	8.1%	•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아 한국의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투자 외국기업이 생산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한 수출도 증가 예상	216.76	7.73
화학제품	5.93%	6.20%	• 한국의 기술 우위 및 중국의 수요 급증 등을 감안시,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 예상 - 단,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 증가 예상	53.54	4.89
기계	6.56%	8.62%	•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33% 가량 높아 한국의 수출 확대 예상 ※ 양국 모두 범용제품을 주로 생산. 단 한국은 high-end, 중국은 low-end 제품 생산에 경쟁력 보유	12.12	2.34
자동차 및 부품	8%	12.49%	• 중국: FTA에 따른 관세철폐시 한국의 대중 수출은 증가하되, 한국의 대중 투자는 감소 예상 • 한국: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등 투자 환경 개선으로 대중 투자가 지속될 전망	9.28	1.61
철강	2.5%	6.56%	• 중국의 상대적 고관세 감안시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 예상 - 단,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를 감안 시 그 폭은 변화 가능	1.21	3.53
비철금속	6.27%	6.48%	• 중국의 대한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이 내수 충족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하는 점 감안시 중국의 대한 수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존재	0.70	1.10
섬유 및 의류	9.98%	11.40%	•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 증가 예상 - 단, 고부가가치 품목 관련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 예상	0.38	0.97

자료 : 외교통상부,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2010.6) 및 한국무역협회

충청남도의 대중국 통상경제 전략

한·중 FTA는 새로운 한·중 관계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내수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국 간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긴밀해지면서 “환황해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한·중 FTA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지방 정부 역시 새로운 대중국 협력 모델과 통상 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중국 수출에 있어 미래의 먹거리를 육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새로운 먹거리는 중국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한·중간 분업구조 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은 우리의 가공기지에서 내수시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중국내 시장과 생산구

특집2 _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대중국 교류 활성화와 과제

조가 바뀌면서 보다 high-end의 융합기술이 체화된 부품과 소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의 산업구조와 기반 기술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충청남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약바이오, 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융합전자기기, 융합 기계부품 등 대표 주력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미래 수요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중국 지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지역경제구조를 바꾸게 될 대대적인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전략들이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의 지역경제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실크로드(一帶一路) 전략, 중부 굴기 전략, 서부대개발 전략, 동북진흥 전략, 신형도시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지역 협력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해 지역 중심 협력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전략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셋째, 쌍방향 협력과 경쟁 확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한·중 협력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일방적 협력이었다면, 한·중 FTA 체결 이후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중국 상품의 공세로부터 국내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중국기업이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배가해야 한다.



특집3 _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대중국 교류 활성화와 과제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 성과와 과제

글 · 박경철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충역사적으로 백제지역에 속했던 충남지역은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던 지역이다. 공주(옛 지명 熊津)와 부여는 북방민족의 문화를 잘 계승해 일본으로 전파했으며, 당진(唐津)은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이었고 서산과 태안지역은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지역이다. 백제의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梁)나라와 교류를 하며 쇠락했던 백제를 부흥시키기도 했다. 부여에서 발견된 백제의 자존심을 되찾게 한 금동대향로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긴 했지만 중국의 향로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패망한 이후 충남도지역과 중국 간의 교류는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중국으로부터 천주교 등 기독교사상이 내포지역으로 들어와 일찍 개화사상이 싹트기도 했지만 이후 이어진 일제의 침탈과 뒤따른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중국과의 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교류와 교역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충남도 또한 중국과의 교류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충남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전기지가 조성돼 대기업 등 많은 기업이 대중국 수출을 주도했다. 현재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47%로 우리나라 전체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26%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높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적 교류 못지않게 충남도는 중국의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하고 있으며 올해 20주년을 맞고 있다. 또한 산둥성을 비롯한 8개 성급 지역과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교류를 하고 있으며 충남도 15개 시·군 또한 중국의 각급 시·협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통상 교류에 비해 공공 및 민간교류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2. 충남도의 대중국 지방정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현황

충남도는 한중수교가 체결되고 2년이 지난 후인 1994년 10월 중국 허베이성과 가장 먼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그 외 모두 8개 지역과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다방면으로 교류해왔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 참고).

교류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도는 1994년 중국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산둥성(1995), 쓰촨성과 상하이시(1998), 연변조선족자치구(2002), 지린성과 장쑤성(2005), 랴오닝성(2010) 등과 우호협력을 체결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중국 남방의 대표적인 전략지역인 윈난성과 2013년 6월 우호협력을 체결했다. 금년 10월에는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고 헤이룽장성과는 우호협력 관계에서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해 교류협력을 체결할 예정이다.

<표 1>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체결지역 및 교류활동 현황

구 분	단 체(체결일)	전체 교류 내용
자매결연	허베이성(94. 10.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 세계대백제전 대표단 참가(10. 9, 5명) 허베이성 경제관계자 방문 도내 기업체 벤치마킹(3회) 충남서예가협회단 허베이성 방문 백제문화제 허베이성 예술단 공연 충남공예조합 허베이성 방문, 양 지역 공예협회간 교류 [청소년교류] (9회, 92명)
우호협력	1. 산둥성(95. 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둥성 청소년문화예술학교 방문공연(13. 8, 15, 100명) 공무원교육원 중국어 과정 현지어학연수(09. 10, 산동대 15명) 청다오경제무역박람회 및 산둥성 청소년 밀레니엄 행사 참가(01)
	2. 연변조선족자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유치설명회 상호교차 개최 천안월병 식품엑스포 연변주 농식품업체(3개) 참가(09. 9월) 농림 수산 환경, 문화 관광 체육 교류 : 20회 223명 청소년 교류 등(4회/44명)
	3. 지린성(02. 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폐막식에 지린성 부성장 참석 인삼엑스포 대표단 및 전기업체 참가(11. 9, 14명) 지린성 동북아청소년축제 공연단 참가(2회)
	4. 장쑤성(05.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석두 행정부지사 환경교류회 및 환경박람회 참가(13. 11) 환경분야 시책교류회 개최(매년) 공무원교육원 정예공무원과정 중국어 연수(09. -11, 동남대, 57명) 장쑤성 노인복지포럼 참가(11. 10, 복지보건국장)
	5. 쓰촨성(08.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촨대지진(08. 5. 12) 피해복구 성금 전달(2,000만원) 서부박람회 참가 및 우수상품전 개최(10. 10, 투자통상실장 등 대표단 7명)
	6. 상하이시(08. 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국장 신도시 건설관련 벤치마킹(09. 2월) 기획실장 일행 상하이엑스포 초청 참가(10. 5) 투자유치 설명회, 우수상품전 개최
	7. 랴오닝성(10. 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랴오닝성 잉커우항과 항만교류를 위한 실무방문(13. 4)
	8. 윈난성(13.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 윈난성 쿤밍국제 화훼박람회 참가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벤치마킹 우호교류협정체결 및 제1회 중국-남아시아 박람회 참가(13. 6)

자료 :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재정리

충남도 15개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을 보면, 지역의 위치와 산업구조에 따라 그 편차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북부지역인 천안, 안산, 당진이 가장 활발히 중국과 교류협력을 전개하고 있고 서해안지역인 서산, 태안, 보령지역도 비교적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천안은 산업과 문화(홍타령축제 관련)부문에서 교류가 활발하며, 아산은 산업과 농업부문에서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당진과 서산은 새로운 항로개설 관련해 중국을 활발히 접촉하고 있고 태안은 관광 부문에서 중국과의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륙지역지만 논산시에서는 기호유교문화권의 발전을 진흥하기 위해 최근 들어 산둥성 지닝시(齊寧市)와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공주시, 계룡시, 서천시, 예산군은 자매결연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교류활동이 저조하며 서천군의 경우에서 서해안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 매우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15개 지자체장 대부분은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지역의 상품 시장 확대에 가장 큰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실제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직접 수출 상담과 전시회 개최를 통해 계약추진 건도 상당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의 중개 혹은 지원으로 중국의 각 지역 혹은 단체와 교류도 진행되고 있다. 교류협력 분야는 주로, 의료, 문화행사(축제 참가, 고대 뱃길 탐방 등), 농업, 교육 및 홈스테이, 통상, 종교(유교) 탐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충남도의 대중국 통상교류 현황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체결한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전체 교역량 가운데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점차 높아져 갔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 가운데 충남의 대중국 교역량의 타 지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대중국 수출 의존도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별 2013년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경기도, 울산광역시에 이어 3위이다. 금액은 약 65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인 5,590억 달러 중 11.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며, 충남의 경우 충남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의 비중이 47%로 전국에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다. 충남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9.2%로 나타났다.

● 특집3 _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대중국 교류 활성화와 과제

〈표 2〉 2013년도 광역자치별 수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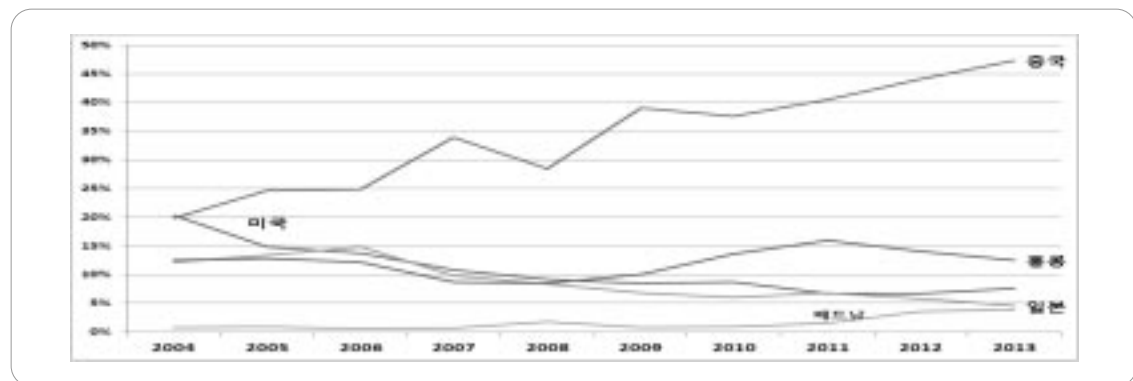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지역	전체수출	중국수출	비중	순위	지역	전체수출	중국수출	비중
1	경기	102,005	32,547	32%	1	서울	128,640	28,635	22.3%
2	울산	91,513	14,395	16%	2	경기	102,150	26,027	25.5%
3	충남	65,185	30,856	47%	3	울산	83,915	1,971	2.3%
4	서울	60,316	17,935	30%	4	인천	38,660	5,402	14.0%
5	강북	53,765	14,502	27%	5	전남	44,655	920	2.1%
6	경남	51,859	6,921	13%	6	충남	33,980	3,131	9.2%
7	전남	41,402	11,851	29%	7	경남	28,496	4,508	15.8%
8	인천	27,288	4,395	16%	8	경북	17,181	2,897	16.9%
9	광주	15,868	1,400	9%	9	부산	13,471	3,870	28.7%
10	부산	13,263	2,441	18%	10	충북	6,509	1,701	26.1%
11	충북	13,735	4,516	33%	11	전북	4,470	972	21.7%
12	전북	10,116	1,351	13%	12	광주	4,915	479	9.7%
13	대구	7,012	1,626	23%	13	대구	3,532	1,470	41.6%
14	대전	4,030	894	22%	14	대전	3,341	744	22.3%
15	강원	2,173	232	11%	15	강원	1,411	297	21.0%
16	세종	904	255	28.2%	16	세종	1,058	379	35.96%
17	제주	103	4,876	5%	17	제주	260	29	11.3%
합계		560,536	145,869	26%	합계		516,643	83,432	16.1%

출처 : 한국무역협회 지역별수출입 통계(2013. 12 기준)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중국뿐만 아니라 소위 중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홍콩, 대만에 대한 충남도의 수출액 비중을 합하면 전체 수출액 비중의 64.5%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화권 수출액 비중이 33.8%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충남도의 대중국 교역(수출)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고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중국 경제교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림 1〉 충청남도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 추이



4. 향후 과제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충남도는 그동안 행정 및 경제교류 이외에도 인적교류,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관광교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첫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방향과 초점이 희미하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교류의 폭이 넓고 다양해지는 것은 좋으나 교류협력지역이 넓다보면 충남도가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지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교류협력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함으로써 충남도가 목표로 하는 상품수출의 기회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지방 정부의 공공외교 차원에서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잘 보이지 않는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중국과 교류협력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은 자칫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각 광역자치체에서는 대중국 교류협력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얻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비교적 뚜렷하지만 충남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충남도는 최근 '서해안비전'을 제시하고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하려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환황해권의 핵심국가인 중국, 특히 발해만과 서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연해안 지역들과 어떤 교류협력을 실시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충남도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는 중국의 9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연계 협력한 활동들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충남도 자체적으로만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충남도와 각 15개 지자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충남도와 중국의 성급 지방정부 간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하급 지자체 간 교류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협력을 진행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관해 그간 축적한 다양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통상 교류사업 지원에서 민간단체 교류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도내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상품전시와 판매 지원사업에 치중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민 다수가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충남도에서 '서해안비전'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환황해권 물류기지 육성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더 많은 교류협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이 정부 주도에서 민관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다른 국가보다 중국의 비중이 앞으로도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충남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더욱 늘어날 대중국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의 보강과 함께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과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포럼, 자문위원회 등) 구성 등도 필요하다.

※ 본 내용은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4)'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충남의 생물다양성 보전제도 도입방안 고찰

글 ·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산업혁명 이후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인간활동에 의해 생물다양성이 100배 이상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경제적 폐해가 커지고 그에 따라 삶의 질 및 인류복지도 급감하고 있다(UNEP, 2012). 이에 따라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가 열린 리우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채택되었고, 협약당사국은 2014년 8월 현재 194개국에 이르고 있다.

CBD의 목적은 1) 생물다양성 보전, 2)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 또는 프로그램 개발, 2)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의 통합 지원, 3)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감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 국가보고서 제출,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공평한 배분을 다루고 있다. 2020년까지 국제사회가 추진할 생물다양성 글로벌 목표와 국가 목표의 연계를 강화토록 하고 있는데, 보호지역 확대(육상 12.6% → 17%) 등 20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당사국에 2015년까지 이행전략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12차 당사국 총회가 금년 10월 평창에서 열리게 되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다. 이번 당사국 총회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주요 협상의제는 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아이치 목표(2011-2020) 이행 중간점검 및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로드맵 협상, 2) 유전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이행체계 구축, 3) 2015년 이후 유엔개발의제(Post 2015 Development Agenda)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설정에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목표 반영 등이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제6조에서 각 당사국은 생물다양성 특수성과 능력에 따라 전략 또는 프로그램 개발·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2 시행) 제7조에 따른 법정 종합계획으로 생물다양성 비전과 전략 목표를 제시하는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4~18)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변화와 함께 충남은 도지사의 “정책담론 기자회견(2014. 3. 19)”에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생태계서비스 관련 생물다양성 증진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충남의 자연환경에 대한 목표와 평가대상에 적합한 평가지표 및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식하고 지불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보호지역 사유지 매입과 주민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호응도는 높지 않다.

충남에서는 주요 철새서식지인 서산시, 홍성군, 서천군에서 서식지 보호차원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참여하고 있다. 서산시 천수만 지역에 큰기러기 등의 취식지 마련을 위해 1700ha, 홍성군은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1291ha 규모로 벼짚논과 무논을 조성하였다. 서천군은 2012년 금강제방 1.2km이내 지역에 가을걷이 후의 무논이 아닌 4계절 무논을 조성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 해당지역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고 농지은행에 농지를 기탁함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이 중지되는 등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제도에 대한 참여도가 정체상태에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자연공원이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구역 완화조정 관련 민원에서 나타나듯이 보호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호지역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여러가지 경제적 정책수단¹⁾을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생태계서비스 평가나 지불제도, 생물다양성 상쇄프로그램, 생물다양성 은행제도 등에 대한 기초 연구, 지표 설계, 제도 구축 등이 요구된다. 이 방법론 정립과정에서 평가대상과 평가지표 설정 등에 대해 충남도민의 절차적 합의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 충남의 생태계 현황과 관리계획

충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내 15개 시 군에 대한 생태지도(비오톱지도) 작성을 완료하였다

1)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경제정책수단(Economic Policy Instruments)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생물다양성 상쇄제도(Biodiversity Offsets), 생물다양성 은행제도(Biodiversity Banking) 등이 있다.



(2014. 5). 이에 해당 시 군은 바이오톱지도를 계획과정에서부터 개발과 보전간의 갈등완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연계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으나, 상위 관련 법률이나 지원이 없어 실제 상세적용은 미흡한 상태다.(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태안군은 도시계획조례에 반영, 당진시는 개발업무처리지침에 적시하고 있다.)

바이오톱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2006. 1. 시행) 제6조와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2005. 6. 28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근거한 생태축(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톱지도 작성 계획을 포함하여 바이오톱지도 작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이오톱지도를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나 협의 및 심의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제 개발사업 단계에까지 표준화되고 일관된 평가가 가능하며, 이는 도시의 양호한 녹지를 보전하고 생태적 수용력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화력발전으로 인한 서해안 환경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 가로림만 조력발전, 하구담수호 개발 및 보전,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건설 등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충남도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상태다.

한편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강화와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존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변생태계 보전사업(2015~18)은 부여군과 청양군에서 생태문화 숲 조성, 생태숲복원, 생물서식 습지, 둠벙 보전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진 당산생태공원의 야외 생태학습장, 생태학습관, 자생식물원 등과 예산 황새고향 서식지 조성사업으로 고향의 숲, 서식 생태습지, 생태체험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생태자연도



〈그림 2〉 토지피복도(2010년)

3. 생물다양성 보전제도

3-1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PES)

1) 제도 도입 필요성

PES 제도는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자연환경 모니터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호지역 지정이나 관리 업무를 개선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국가 생물다양성 정책목표 및 충남의 자연환경 보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다음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인식 증진 및 동기 부여 :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집행과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환경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자연환경 보전정책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 자연환경 모니터링, 평가, 연구 활성화 : 자연환경 구성요소의 공간적, 사회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므로 특정 관리 방안을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제도시행의 오류를 수정 보완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특성 고려 : 자연환경 보전의 권한과 책임, 조직과 예산 등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적 유인책 제공 마련이 필요하다.
-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14~18)」에서는 생태계서비스 확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액 등의 상향 조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및 상채 프로그램 활용방안 연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도 2014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사업비를 733백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 흐름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태계서비스의 유지 및 확충 활동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제도 도입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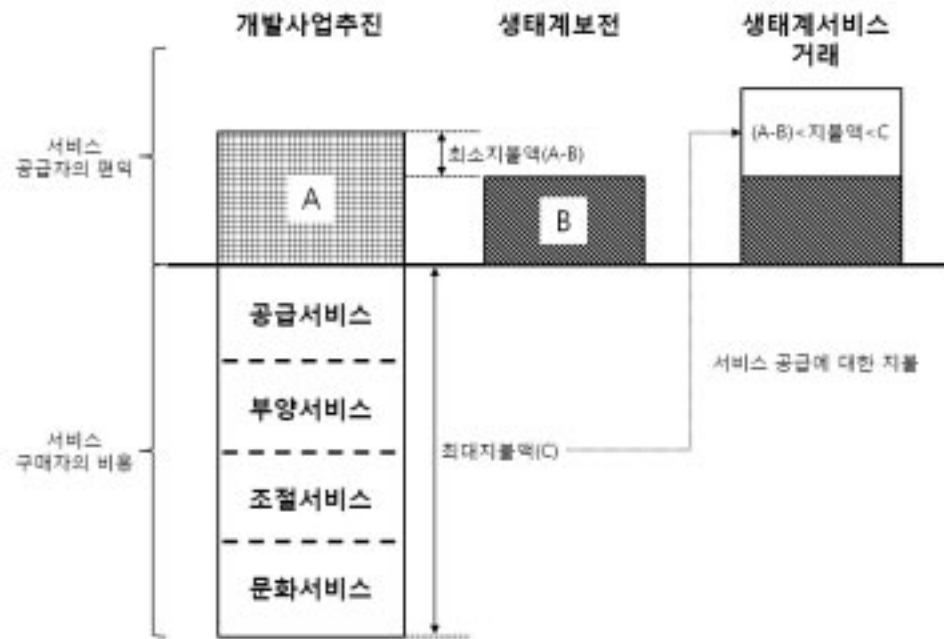
PES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민들이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둘째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PES와



비슷한 제도의 개선, PES 신규 제도의 도입, 관련 제도의 융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생태계 서비스 개념 이해 및 인식 제고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및 가치 평가는 지자체에서 제도 시행 기반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신규 제도의 도입은 국가 차원의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림 3〉은 환경자산 소유자가 토지용도 변경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개념도를 설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인 소유자가 생태계 보전을 통해 얻는 경제적 편익은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편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소유자가 경제적 편익을 이유로 개발할 경우 그동안 제공되었던 생태계서비스 기능은 공급이 중단되며, 사회경제적 비용(외부효과)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PES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은 외부효과의 내부화에 있으며, 특히 특정 조건하에서 외부효과는 소유관계가 확실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사적 협상이나 거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실질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안소은, 2010).

결국 PES 제도는 보호지역 지정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비해 보다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며, 경제적 유인책 제공을 통해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자원관리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안소은 외, 2008).



〈그림 3〉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개념도

1단계: 생태계서비스 개념의 이해 증진

- 생태계서비스 현황 조사: 현재 구축된 비오톱지도를 활용하되 하천, 호소, 해양생태계에 대한 추가 조사와 기 구축 자료의 지속관리가 필요하다.
- 생태계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 생태계서비스 관련 전통 지식 조사: 마을숲, 둠벙, 농어촌유산 등 전통적인 생태자원 및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발굴한다.

2단계: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 생태계서비스 DB 구축
-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시행

3단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도입

- 유사 관련 제도의 개선(부과대상, 부과금액, 사용용도 등의 개선):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물이용부담금,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 등
- 신규 제도 도입: 생태계서비스 총량제, 우선보전 및 복원지역 선정, 기금조성, 매개조직 운영(생물다양성 은행 운영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시범사업 실시(환경부 지원 요청)
- 관련 제도의 통합적 또는 융합적 운영: 농업·임업·수산업 분야의 보상제도 및 기금사업, 생태관광 연계, 토지이용 규제관련 도시계획 연계

3-2 생물다양성 상쇄제도(Offset)

1) 제도 도입 필요성

생물다양성 상쇄(Offset) 제도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토지개발에 따른 생물다양성 손실이 불가피할 때 다른 장소에서 대체 서식지 또는 습지식생 등을 조성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즉,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생물다양성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생물다양성 상쇄제도를 운영한다.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훼손을 보상하기 위해 그곳이나 다른 곳에 서식지를 복원·조성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습지은행제도와 생태계 훼손에 대한 벌금 부과(미국), 직접 보상 및 보상습지에 의한 대체제도(독일)도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협의조건으로 대체서식지 조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대상지나 인근에 멸종위기종 등이 발견됐을 때 수립해야 하는 보전방안 대신 대체서식

지 조성 계획으로 대신함으로써 서식지 훼손에 대한 면죄부라 비판받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개발사업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 협의건수는 1982~1999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00~2004년에는 17건, 2005~2010년에는 68건으로 급증했다. 이들 88건의 대체서식지 관련 협의의견 사업유형은 골프장 등 체육시설 26건,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12건, 도로건설 10건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체서식지의 일치된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미흡한데, 주요 생물종에 대한 서식환경 조성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서식지 기능을 지속하려면 먹이자원, 피난처와 잠자리, 충분한 이동통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통과보다 조성된 대체서식지를 합당한 유형의 보호지역 지정으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선 고유 서식지를 충분히 보전하고 불가피할 경우 대체서식지를 만들되 해당 종의 생태적 특성과 이동경로 등을 감안해서 잘 만들어야 한다. 대체서식지 조성관리를 토목 조경업체에 맡기기보다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기구인 생태환경 거버넌스 틀 구조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2) 제도 도입 방안과 적용 사례

생물다양성 보전차원에서 순손실없음(No Net Loss) 정책을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는 2012년 현재 55개국에 이른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구체화하여 각국 정부기관, 국제기관, 국제기업이 이름을 걸어놓은 BBOP(Business and Biodiversity Offset Program)는 2012년에 생물다양성 상쇄 프로그램 시행 국제기준을 발표하였다. 자발적이라는 것은 세계은행 그룹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C)가 이 기준을 대출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BBOP가 추천하는 생물다양성 상쇄의 정량평가의 대표적인 방법론이 서식지평가절차(HEP)이다. 생물다양성 बैंकिंग에 대해서는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활발해지고 있으며, HEP을 바탕으로 개발된 Habitat Hectares법 등의 간이 정량평가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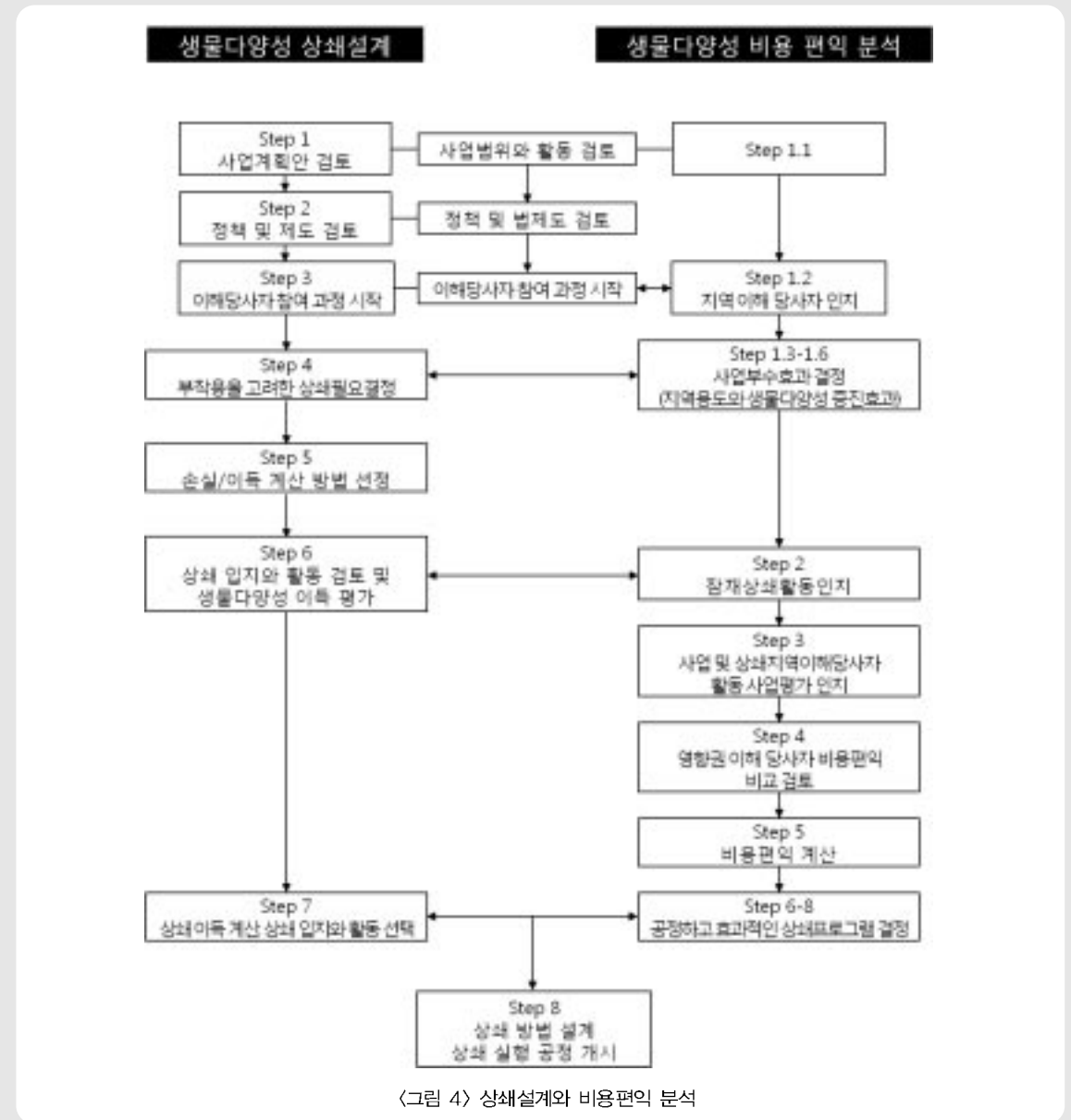
서식지평가절차(Habitat Evaluation Procedures, HEP)는 미국 어류 및 야생생물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s)이 개발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에 활용되는 평가방법론으로 특정 야생동물의 이용 가능한 서식지에 대해 양적·질적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HEP는 서식지 가치의 대표적 지표로 인정되는 야생동물종의 서식지 가치를 정량화 하는 것이다.

HEP는 야생동물 서식지 비교에 대한 두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1) 동일 시점에서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 가치, 2) 같은 지역의 미래 시점에 대한 상대적 가치 등 두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예상되는 토지 및 수자원 이용 변화가 야생동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할 수 있다.

HEP방법은 서식지 단위(Habitat Units, HU), 서식지적합도지수(Habitat Suitability Index, HSI)의 개념

을 이용하는 것으로 HSI는 0.0~1.0 범위의 값을 갖는다. 서식지 단위 HU=HSI×평가대상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HU는 선택된 생물종들에 대해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을 평가하는 속성을 의미하며, HU 수치는 HSI(quality)와 이용 가능한 서식지의 총 면적(quantity)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 방법론은 야생동물종과 서식지, 서식지 수용용량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3-3 생물다양성 은행제도(B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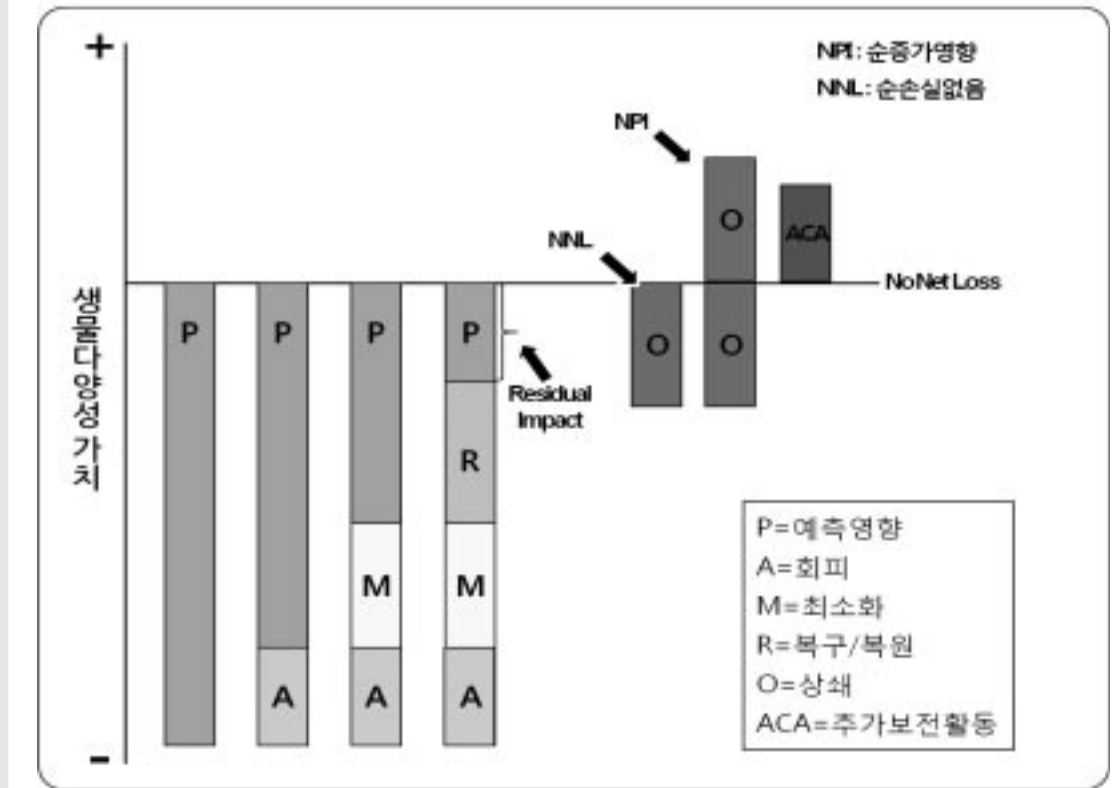
1) 제도 도입 필요성

생물다양성 은행(Biodiversity Banking) 제도는 기업 활동이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생물종 서식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 활발한 보존활동과 복구 프로젝트를 통해 피해를 적절하게 상쇄하여 보상토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개발 등의 인간 행위와 생태계 보전 간의 건전한 균형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정신에 맞게 환경영향평가에서 적절한 대안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에 있어 계획 입안자,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생태학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 가치를 고려한 저감방안으로서 회피, 최소화만이 아니라 보상도 필요하고, 저감방안의 검토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복원이나 생물다양성 순손실없음(no net biodiversity loss)을 실현하도록 보상저감 방안을 포함한 여러 대안의 비교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순손실없음(no net loss)은 생태계의 질과 양을 현황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손실없음을 정량평가하는 도구로서 HEP는 가장 적합한 수법의 하나인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는 제2조에, 환경영향평가는 제14조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생물다양성에의 현저한 악영향을 회피, 최소화 또는 보상하기 위해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체결국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 2002년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Guidelines on biodiversity-inclus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환경평가 지침(Guideline on biodiversity-inclusiv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이 채택되었다. 두 지침의 작성에는 국제영향평가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IAIA)가 참여하였다.



〈그림 5〉 생물다양성 가치와 저감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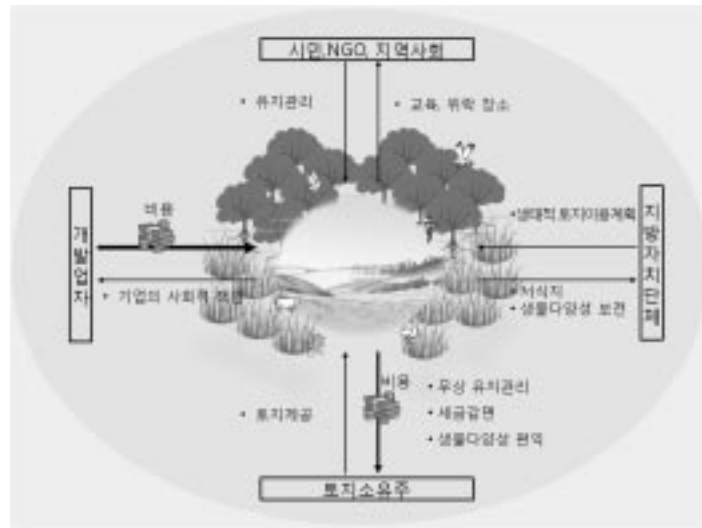
2) 제도 도입 방안과 적용 사례

이 방법은 순손실방지 정책과 전략환경평가 등의 정책과 방법으로 기업 부지와 기업 활동 평가 때문에 서식지평가절차(HEP)를 간이화 한 몇 가지 방식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아 이치, 카나가와, 치바)나 토지 소유주는 사토야마 뱅킹(里山 銀行: 생물다양성 뱅킹과 일본의 마을 산·마을 땅·마을 바다 보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융합시킨 것)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토야마 경관 보전 지불제도는 농약 사용량을 75~100% 줄이고, 겨울철 무논을 채택하여 생산한 황새알의 가격을 23~54% 비싸게 받고 있다. PES 제도와 관련하여 2003~07년에는 농부에게 논 1천㎡당 4만엔의 직불금 형태로 지불하여(현재 豊岡시에서는 7천엔 지불), 그 결과 황새 서식지가 0.7ha에서 212.3ha로 증가하고, 연간 관광수입 10억엔, 도시의 수입은 1.4% 증가하였다.

미국의 습지저감은행(Wetland Mitigation Banking) 제도는 개발자들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습지에 대

한 임대권(credit)을 구매하여 습지 손실을 보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습지 임대권 시장규모는 연간 110~180억 US\$ 로 추정된다(Madsen et al., 2010).



〈그림 6〉 생물다양성 은행제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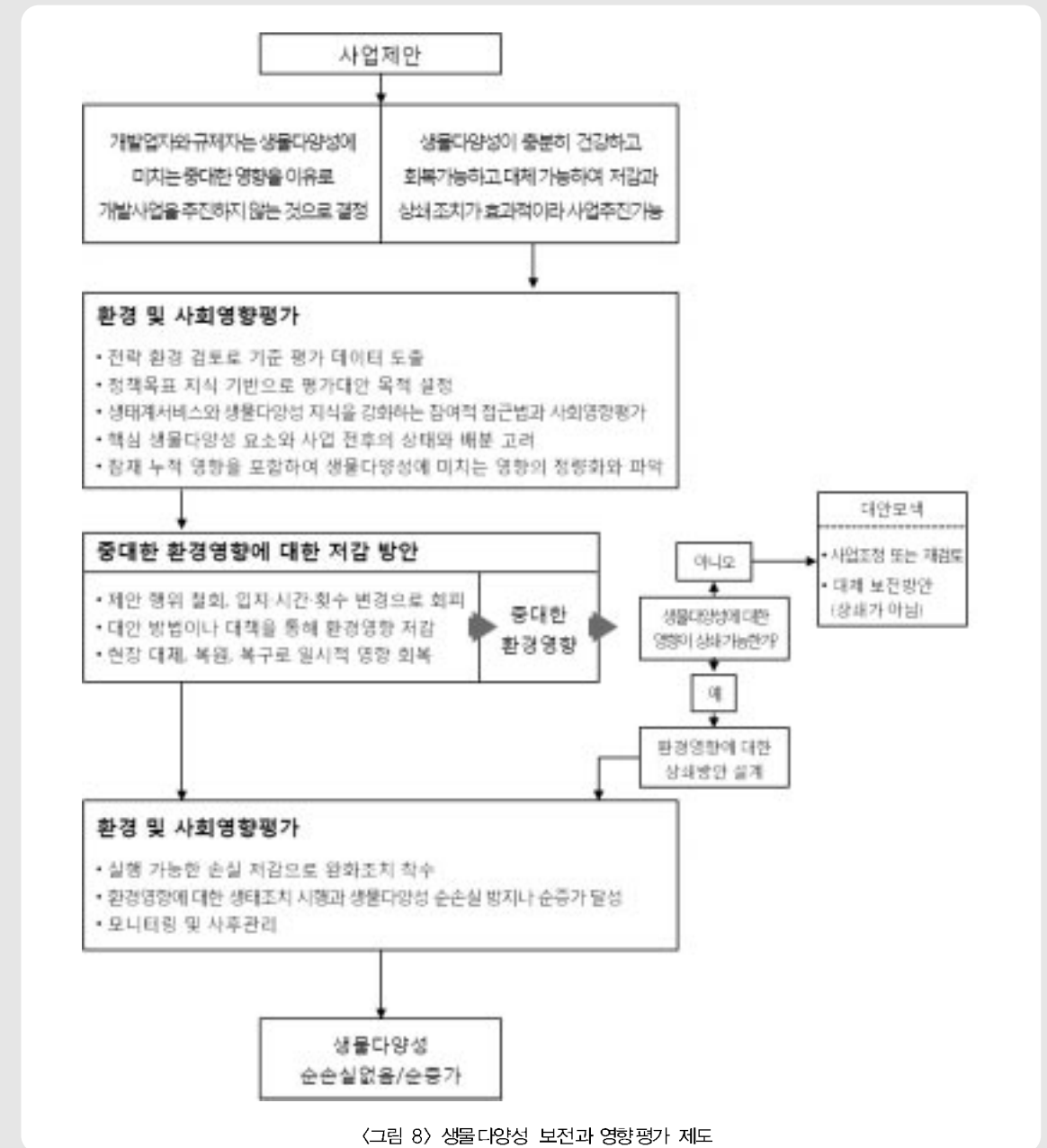


〈그림 7〉 경관지불제도 생산물(일본 효고현)

4.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발전 방향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생물다양성 증진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용하고자 하는 제도의 특성에 따른 규모, 사업비 등을 추정할 수 있다. 해당지역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경우 상응하는 상쇄 규모, 면적, 생태가치의 객관화 문제가 제기된다. 생태계서비스 및 가치를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갈등요인도 상당히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지침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스코핑)이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 행위를 심사할 때의 판단 근거는 제안된 저감대책의 효과가 준거의 틀이 된다. 즉, 개발행위가 생태계에 미치는 나쁜 환경영향을 제안된 저감대책에 의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피, 최소화, 혹은 보상할 수 있는가 하는 저감효과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 점이다.



〈그림 8〉 생물다양성 보전과 영향평가 제도

현재 충남의 보전지역은 국립공원 2개소 93,504km²(해역 제외), 도립공원 3개소 78,740km²,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48개소 97,876km², 습지보호구역 2개소 15,365km², 생태경관보전지역 2개소 0,760km², 상수원보호 구역 6개소 5,542km² 등으로 규모는 전체 면적(육역 기준)의 3.37% 수준이지만 생물다양성 보전 제도의

충청남도 상수도 정책의 현황과 전환방향

글 ·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1. 물의 위기와 대응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인류 문명은 물의 관리 및 이용과 함께 발전해 왔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문명과 기술이 그 어느 때 보다 발전한 현대에 물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원이 되어 가고 있다.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생활에 필수적인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 정부의 주요행정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수 십 년 동안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물 관리의 주요 과제로 삼아왔지만, 아직도 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수량이 감소되며 수생태계가 급속하게 파괴되고 생물종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은 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지만,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인간 뿐 아니라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의 삶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건조한 지역은 더욱 건조하게 습지는 더 습하게 만들면서 변동성이 극대화할 것'이라는 물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물의 미래는 더욱 어둡다. 그리고 그들은 '물 문제들 대응하는데 과거는 더 이상 미래의 믿을만한 안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과거의 방식이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면,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과학과 기술은 발전해 왔는데, 왜 우리는 물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일까?

세계적인 물 운동가 모드 발로(Maude Barlow)는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담수 공급원의 고갈, 물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거대 기업의 물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 시대의 생존과 지구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에 대응 방안으로 물에 대한 세 가지 서약을 담은 푸른서약(Blue Covenant)을 제안한다.

첫째, 깨끗한 물이 지구와 지구에 사는 생물의 권리임을 인정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 '물 보전 서약'이다. 수자원을 보호하고 유역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하수가 채워지는 양보다 많은 양이 이용되

를 도입하거나 개발사업 추진 시 생태평가제도의 틀을 시행한다면 개발과 보전간의 갈등을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보전지역의 점유 지정율도 높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충남의 생태보전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규모를 확대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추구하는 것은 생태계서비스 경제학의 접근법(TEEB's approach)에서 강조하는 모든 지역사회에서 생태계의 가치를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학 관점에서 가치를 입증하고, 의사결정에 생태계의 가치를 통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안소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환경정책연구12(3), 2013.
안소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지수체계 개발, 2013.
여형범, PES 제도 도입 조사 연구, 2014.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2010.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운영체계 개선 연구, 2012.
환경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14~18), 2014.
BBOP, Biodiversity Offset Cost-Benefit Handbook, 2009.
BBOP, The Relationship between Biodiversity Offsets and Impact Assessment, 2009.
IPIECA/OGP, Ecosystem services guidance, 2011.
OECD, Paying for Biodiversity: Enhancing the cost-effectiveness of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2010.
TEEB,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기업을 위한 보고서 요약본, 2010.
TEEB,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도시관리 관점에서의 생태계 서비스, 2011.
UN, The Value of Forests: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in a Green Economy, 2013.



〈홍보대사 스타생물 4종〉

각 생물서식지를 의미하는 산이(반달가슴곰), 물이(수달), 들이(미선나무), 하늘이(왕오색나비)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홍보대사로 선정되었다. 이들의 이름대로 생물서식지를 합하면 지구 서식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함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지 않도록 하며, 지표수의 오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물을 가진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이 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자국의 물에 대한 주도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물 정의 서약'으로, 저개발국의 물 개발에 지역주민들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모든 정부가 물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인정하는 '물 민주주의 서약'으로 물은 기업의 이익 추구 대상이 아니라 공적관리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물 관리 현황, 물과 관련된 미래의 위기, 그리고 물 관리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상수도 정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정책이 충청남도의 물 관리 현황에 비추어 적절한 방안인지를 검토해 보고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충청남도의 상수도 현황

2.1 충청남도의 상수도 보급 현황

〈표 1〉 시도별 상수도 보급 현황(2011년)

구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시설용량 (천㎥/일)	급수량 (천㎥/일)	급수량 (ℓ/인일)	누수율 (%)	유수율 (%)
전국	51,717	50,638	97.9	30,944	16,398	335	10.4	83.5
서울특별시	10,575	10,529	100.0	4,600	3,200	304	3.8	93.8
부산광역시	3,586	3,586	100.0	2,643	1,014	283	5.0	91.1
대구광역시	2,529	2,529	100.0	1,640	776	307	7.0	89.6
인천광역시	2,851	2,851	100.0	2,163	968	345	9.5	86.2
광주광역시	1,478	1,471	99.6	780	475	323	11.9	84.1
대전광역시	1,531	1,529	99.9	1,260	502	329	6.4	89.5
울산광역시	1,154	1,144	99.1	550	317	283	8.3	88.6
경기도	12,240	11,938	97.5	2,908	3,770	319	6.9	87.5
강원도	1,550	1,465	94.5	791	627	463	23.0	64.0
충청북도	1,589	1,535	96.6	349	545	396	9.2	82.2
충청남도	2,149	1,887	87.8	159	605	370	15.1	75.3
전라북도	1,896	1,834	96.7	321	760	436	19.0	70.7
전라남도	1,938	1,756	90.6	654	534	355	21.6	68.2
경상북도	2,739	2,654	96.9	1,182	1,053	449	22.2	67.1
경상남도	3,375	3,346	99.2	1,339	1,041	344	20.5	69.4
제주도	583	583	100.0	509	208	357	14.8	76.7
k-water	-	-	-	9,096	-	-	-	-

※출처 : 환경부 상수도 통계(2012)

충청남도에서는 일일 605,000톤의 물이 상수도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돗물을 생산하는 지방상수도 시설은 159,000톤으로 공급량의 2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시·도의 급수량 대비 지방상

수도 공급시설용량의 평균 비율 133%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전국에서 지방상수도 시설용량이 공급량보다 작은 지자체는 충북, 충남, 전북 세 개 도인데, 그중에서도 충청남도의 상황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낮은 상태이다. 이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제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비율 85%를 기준으로 보면 충청남도의 상수도 정책이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태이다.

상수도 보급률은 8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누수율은 15.1%로 전국평균 10.4%보다 높지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일인당 물 사용량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유수율은 전국평균 83.5%보다 낮은 75.3%로 전반적으로 수돗물이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보급률 누수율, 유수율은 상수도 정책의 단기적 투자 방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자치단체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데 상수도 보급률은 중요한 지표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 보급률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모든 도민들이 안전한 물을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2.2 충청남도의 상수도 운영 현황

〈표 2〉 전국 시도별 수도요금 현황

구분	유효수량					
	연간 총 급수량(천㎥)	연간 부과량(천㎥)	부과액(백만원)	요금(원/㎥)	생산원가(원/㎥)	현실화율(%)
전국	6,020,698	5,025,096	3,112,121	619.3	813.4	76.1
서울특별시	1,187,287	1,113,675	579,276	520.1	621.4	83.7
부산광역시	374,007	340,698	216,809	636.4	833.6	76.3
대구광역시	286,197	256,473	137,772	537.2	583.5	92.1
인천광역시	353,152	304,439	196,358	645.0	696.3	92.6
광주광역시	173,423	145,802	76,416	524.1	626.7	83.6
대전광역시	187,533	167,803	81,310	484.6	541.5	89.5
울산광역시	115,884	102,674	78,402	763.6	920.5	83.0
경기도	1,378,025	1,205,638	745,738	618.5	734.5	84.2
강원도	229,076	146,686	107,695	734.2	1,385.9	53.0
충청북도	199,037	163,677	111,825	683.2	850.6	80.3
충청남도	221,276	166,539	120,937	726.2	1,049.6	69.2
전라북도	277,478	196,174	151,646	773.0	1,029.0	75.1
전라남도	195,021	133,030	104,623	786.5	1,164.1	67.6
경상북도	384,477	257,994	167,688	649.9	1,077.8	60.3
경상남도	382,761	265,451	199,118	750.1	1,004.9	74.6
제주특별자치도	76,067	58,344	36,531	626.1	985.0	63.6

※출처 : 충남 물수요관리종합계획(2012)



충청남도 상수도 평균 요금은 726원으로 전국 평균 619원에 비해 107원 높고, 생산원가는 1049원으로 전국 평균 813원에 보다 236원 높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69%로 전국평균 76% 보다 낮다. 이러한 수치들은 인구, 도시화율, 수자원 여건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전국의 상황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요금현실화율이 점점 악화되는 원인이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경우와는 달리 생산원가의 증가율이 가격상승에 비해 가파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문제일 수 있다. 생산원가의 증가 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지방상수원에 비해 2~3배 비싼 광역상수원·정수 이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유추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상수도 관리에서 경영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생산원가를 통제하는 것이 관건이다. 높은 광역상수원수 의존도와 수자원공사 전체의 운영성과에 연동되어 있는 생산비 구조, 낮은 투명성 등 생산비를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비해 충남도가 실질적인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3. 충청남도 상수도 통합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3.1 상수도 통합관리 현황

상수도 통합관리란 세계 물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한다는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의 공통 과제「물 산업 육성」의 첫 단계이며, 최종적으로는 1~2개의 기업으로 통합해 민영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전국을 39개의 권역으로 묶어 지방상수도를 통합하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는 충남 북부, 충남 서부, 충남 남부의 세 권역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은 2014년에도 우리나라 물 산업의 전략 수립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그림 1〉 구조개편 및 민간사업 추진 목표

※출처 : 물산업육성방안 2006,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

물산업 민영화는 2008년 이후 행안부의 통합관리 인센티브와 환경부의 노후관 정비예산 우선지원 제도를 통해 강화되면서 2013년까지 전국에서 21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탁 계약을 맺었다. 충청남도에서는 2003년 가장 먼저 위탁을 실시한 논산시에 이어 2006년 서산, 2007년 금산이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했고, 천안은 공업용수 공급만을 위탁한 상태이다.

충청남도 대부분의 기초 자치단체들이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 제안을 검토한 상태이나, 기 위탁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 비용증가, 투자 불이행, 정책독립성 침해 등에 대해 불만이 높은 상태로 홍성, 예산, 당진, 청양 등이 위탁을 포기했다.

3.2 상수도 통합관리의 문제점

국가 차원에서 상수도 통합관리의 목적은 물 산업 육성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명분은 지방상수도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권역별 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우면 운영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기본적인 논리였다. 그러나 경쟁이 배제된 시장에서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실제로도 주장했던 효율성 개선 사례는 없다. 오히려 위탁을 실시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위탁계약을 맺은 수자원공사는 기존의 정수장과 취수장 등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관로를 증설하는 등 지방상수도를 광역화하면서 오히려 지방상수도에 비해 관리비용이 증가했다. 이 과정은 국가적으로는 중복투자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보유하고 있던 생산시설의 가치를 상실하는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충청남도의 광역 상수도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는 다양한 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사라지고 정책 자율성을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수원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획일성으로 인한 또 다른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상수도를 위탁한 이유 중에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었다. 당장 댐의 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하천 유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일을 통해 상수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하천 관리를 방기하게 되어 지역의 물 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탁 이후 상수원보호지역이 해제되어 개발되었고, 수자원공사는 상수원보호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위탁의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것은 물이 고이고 스며드는 유역을 보호하고, 오염을 엄격히 관리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요건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지방상수도의 통합관리와 그를 통한 물 산업 육성 정책의 근거에는 물을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자리 잡고 있다. 물은 모든 사람, 모든 생물이 누려야 하는 공공자원이라는 관점과는 달리 물을 특정 기업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물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물 정의' 요구에 위배된다. 지방상수도 통합관리가 기업이 물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물 민주주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 위탁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세계적인 물 기업들의 저개발국에서 상수도 개발 사업 이후에 나타난 문제와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수자원공사는 민간 기업이 갖는 최소한의 효율성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과다투자 부실투자로 인한 불안정성까지 겹쳐 있다. 수자원공사가 기업의 물 지배로 인한 '물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자원공사의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사전 동의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4. 충청남도 상수도 정책의 전환 방향

충청남도 도청의 지방상수도 관련 업무는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와 '광역상수도 관리 업무 및 댐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상수도 통합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의 내용이다. 도청이 상수도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 연구 기능이 취약해 정책의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시·군에 맡겨두는 것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충청남도가 상수도 정책의 기본 철학과 비전을 수립하고 시·군과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시·군의 여건에 맞는 상수도 사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상수도 정책은 '지속가능한 물 관리'라는 통합적인 틀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상수도 정책이 하천의 유역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일이나 주민들의 물 접근권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일과 분리되어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물 보전'과 '물 정의'를 통합한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물 수요관리, 수질관리와 연계된 물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상수도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충청남도 수자원관리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충청남도의 광역의존도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충청남도 차원에서 시·군의 지방상수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수도 운영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인적자원의 육성, 정책 연구 기능의 활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위탁을 실시한 시·군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위탁 계약의 불공정성을 보완하는 방법과 시민참여 등을 통해 상수도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수도 통합관리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를 바탕으로 한 물 민영화 정책은 첫 단계에서 전국적인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태이고, 상수도 광역화 확대의 또 다른 축인 4대강 사업도 지역의 수자원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상태이다.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정책

타당성 재검토와 정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발 더 나아가 현재의 위기를 충청남도의 수리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의 분권화 방향과 반대로 수리권이 하나의 공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이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수리권의 회복을 위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전환은 기존의 행정 관행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물 관리에 있어서 과거는 미래의 안내자가 아니라는 경고를 되새겨 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전환이 지금까지 정책을 시행해왔던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물 관리의 한계는 기술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가치관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향의 설정과 그 가치의 실현에 적합한 수단을 동시에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그럼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값진 충고-“지적으로는 비관주의, 의지로는 낙관주의”-를 준비 있다. 현재 상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과학적 사실을 적시하는 지적 비관주의와 어려운 과정이지만 해낼 수 있다는 의지에 대한 낙관주의가 어려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경·정창수(2013), 상수도광역화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상수도 관리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모드 발로(2007), 『물은 누구의 것인가』, 노태호 옮김, 지식의 날개
산드라 포스텔(2013), “담수 및 담수의존 인구의 지속가능성”, 지구환경보고서(2013)『지속가능성의 도전』, 오수길·함규진·이창언·광병훈 옮김, 도요새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2006), 물 산업 육성방안
한국수출입은행(2014),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전략



반갑고 재미있게! 서친숲 체험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충청남도
마을기행

“숲이라는 글자의 생김새는 숲과 똑같다. ‘숲’의 어감은 깊고 서늘한데 이 서늘함 속에는 향기와 습기가 번져있다” – 김훈의 ‘자전거 여행’ 중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숲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생김도 느낌도 우리에게 친숙하고 다정다감하다.

마을사업 중심에 숲이 있다면?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자유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충남 서산시 인지면 산동1리 ‘서친숲 체험마을’은 도비산 자락에 자리잡은 녹색마을 이자 숲이 어울리는 곳이다.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을 주민 36명의 발기(대표 한기용)로 서친숲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첫 사업자금은 3억원.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어느 정도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 마을은 우선 전통장류 제조를 통하여 마을주민이 함께 일하는 것이 최우선 사업이다. 콩을 함께 심고 수확해 장을 만들어 판매까지. 비록 큰 시설이나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업 하나 하나에 성취감과 동료애를 느낀다고 한다.

여느 마을사업이 그렇듯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봐도 된다. 우선 서친숲이란 명칭은 마을 주민들의 공모로 선정된 이름이라고 한다. 웬지 낯설지 않고 정감어린 서친숲을 풀어보자면 한자어는 상서로울 서(瑞)와 친할 친(親). 숲과 친함이 상서롭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도비산 자락의 숲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한기용 대표(52세)를 중심으로 시작된 체험사업은 초창기 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다름 아닌 기존의 농촌에서의 삶의 관행을 벗어던지기가 어려웠고 공동의 이익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여느 체험마을의 초기 모습은 대부분 비슷한 듯하다. 이를 잘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필자>.)

한 대표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서울에서 15년간 자영업 을 하다가 귀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고향만큼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자부심이 강했고, 이를 잘 가꾸고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잘 맞아 대표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마을사업에는 총 75가구 중 42가구가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구는 6가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 대표는 “그렇다고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 함께 도와준다.”며 “비록 마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장류를 만들기 위한 콩 등은 시중보다 조금이나마 더 좋은 가격에 사들인다.”고 말했다.



<서친숲 체험마을 한기용 대표>



서친숲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한 체험프로그램은 숲속체험과 승마체험이 있고, 미리 언급된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 등 장류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첫째, 지역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사업으로 도비산 자락의 숲과 세모방죽을 중심으로 한 산책로 조성으로 자연 속에서 도심의 스트레스를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비산에는 임도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트레킹 코스로도 제격이다.



〈숲속체험〉

둘째, 농촌의 장점인 공간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의 개발로 도심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을 경험함으로써 대자연속에서 호연지기를 느끼고 자연의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처음부터 승마체험을 하려던 건 아니다.”면서 “애초엔 열기구를 타고 천수만의 철새 탐조를 계획했는데 인근 공군기지의 반대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 마을에는 6필의 승용마를 구입했고 안전 교육까지 이수하여 체험객이 안전하게 말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말 구입은 정부가 지원한 게 아니라 순전히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구입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직 승마체험이 마을의 효자노릇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많이 알려지지도 못했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셋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거래 유통으로 정성과 자연의 맛이 살아 있는 농산물의 가공으로, 농업 생산물의 판매가 제고 또는 부가가치를 더한 생산 판매로, 수익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포장 판매 유통사업과 장류 제조사업을 들 수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일명 ‘마리틀 장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어디에 내놔도 그 맛이 일품이라는 것인데 현재 큰 항아리가 90개, 작은 항아리는 30개로 총120개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에 가보니 온통 콩밭이다. 칠갑산 콩밭 때는 아낙이 전부 서친숲으로 와야 할 모양이다. 마을 주민들은 아침에 항아리 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 저녁에는 다시 항아리 닫는 것으로 일과를 끝낸다. 한 대표는 “이곳 아주머니들이 손맛이 너무나 좋고 무엇보다 이곳의 자연(햇볕, 바람)이 만들어낸 ‘장’이어서 더욱 맛이 좋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표고버섯 재배로 재미가 쏠쏠하다고 귀띔해주신다.





지난해 이 마을에 방문한 체험객은 500명 남짓. 체험사업과 특산물 판매 매출을 합해도 1000만 원 정도다. 소위 잘나간다는 체험마을 매출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편이다. 아직 체험객은 서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초중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매출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우리는 누가 시켜줘서 하는 사업도 아닐뿐더러 급하게 먹는 밥에 체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필자가 ‘그럼 주변에 부러운 체험마을이 있지 않느냐’ 되물었더니 ‘우리 마을이 가장 좋다’며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서친숲 안내도〉



〈체험장 및 공 가공실〉



〈마을에 울려 퍼지는 확성기〉



〈콩밭이 유독 많다〉



〈마을 전경 1〉



〈마을 전경 2〉

마을 주민들은 마을사업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체험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농촌 사람의 리듬이 무너져버려서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역량이 부족하네~’, ‘교육이 더 필요하네~’라며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도 있지만 말이다. 아마 이 마을 나름대로 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직 사업기반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선불리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성공과 실패의 판단 기준 또한 숫자놀음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간다.

서친숲의 비전은 “반갑고, 재미있게”라고 한다. 만나는 이, 만나는 것, 풀 한포기, 날아가는 새 뿐만 아니라 산허리에 앉아있는 바위나 흐르는 물에게도 반가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을 주민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을 주민이 체험객을 반갑게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체험을 오라고 떳떳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체험객도 마을주민과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것이고 편하고 행복한 농촌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왼쪽부터 한기용 대표, 박선자 총무, 안정선 팀장〉

한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우리 마을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체험에 급급했다.” 그러면서 이걸 바꿔보려 한다고. 농촌 체험은 온전한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 비웃음을 살 뿐. 그러기에 지금의 체험마을 사업은 사업목표에 비해 너무 형식적이고 외형 위주의 사업 진행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우선 마을 주민들이 행복해져야 한다. 그것이 마을 주민 전부가 아니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려면 우리의 가치를 좀 더 정확히 느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치부를 일부러 감추면서 보여주지 위한 포장기 아닌 우리 안에서 서로 반갑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충남 로컬푸드 식당이 떴다



글 · 박래휘 충남 로컬푸드 식당 미더유 심사위원장

벌써, 충남 로컬푸드 식당 인증제도인 '미더유'의 시작과 더불어 본인이 심사위원을 맡은 지도 햇수로 3년차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더유' 사업에 대한 원고요청을 받고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 '미더유' 사업을 알리는 방향과 향후사업방향에 대한 그 간에 심사위원으로 겪은 점을 위주로 전하고자 한다.

먼저, 충남 로컬푸드 식당 '미더유' 인증제도의 탄생과 기준

충남 로컬푸드 식당 '미더유' 인증제도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안심먹거리를 만들고, 충청남도 3농혁신의 일환으로 2012년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다.

내 지역에서 나오는 신선한 식자재를 이용하여 건강한 충남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창조하고자 충청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충남 농어업6차산업화센터가 농부와 직거래 하거나,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을 찾아 인증해 주는 사업이다.

'미더유'가 햇수로 3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지역농가와 미더유식당이 해마다 매출이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충남지역은 예로부터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충남 지역 음식의 참맛을 증미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우리지역에서 자란 농수산물을 사용하여 정성스레 만들어진 음식이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더유' 사업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미더유' 인증기준은 먼저, 1차 서류접수후 현장 심사 평가를 거친다. 그 기준은 현장심사평가는 맛(25), 지역농산물 사용정도(50%미만 기준탈락) 및 농산물 가격수준(40), 친절도(15), 업소위생(20), 가점(5)으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되며, 80점 이상은 로컬푸드 인증, 70점 이상 80점미만은 예비업체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충남미더유식당의 로컬푸드의 거리기준은 내지역에서 50Km이내의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기에 지역 내 농가와의 상호협력이 더욱 필요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왜, 로컬푸드 식당의 성장이 중요한 것인가?



충남 로컬푸드 식당의 인증제도인 '미더유' 사업이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지역농가의 안정된 생산매출과 생산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통단계를 줄임으로 그로인한 농가의 생산물을 1차유통단가보단 높이 받을 수 있고, 소

농들에게는 SNS나 블로그를 이용한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개별마케팅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본분인 농작물의 생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의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로컬푸드 식당은 지역 내 농수산물을 직거래 혹은 로컬푸드 매장과 재래시장을 통해 보다 신선한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로컬푸드 식당은 맑은 환경과 먹거리건강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 식품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자까지 이동하게 되는 거리)를 줄임으로 해서 식품의 운송에서 오는 탄소배출을 줄임으로 지구환경 보호에 직·간접으로 이바지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재료와 직거래 등을 통한 누가 생산하였는지에 대한 생산자 이력을 알 수 있고

생산자의 농가를 방문하는 체험도 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를 엮어주는 연결고리 속에서 부가적 관광 상품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자면, 2014년에 예비 미디어 로컬푸드 식당인 홍성군 홍동면의 '행복나누기'의 경우는 지역 농부들과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이를 식당 내외부에 포스터를 통해 알림으로 해서 식당을 찾는 고객들에게 식자재에 대한 안심과 더불어 농산물을 별도 구입 할 수 있는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지역 내 다른 식당들에게도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게 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한다.

충남 로컬푸드 식당 미디어의 업체들이 인증을 받기 전과 이후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점차적인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자료: 충남 외식업 로컬푸드 인증제도(미디어) 활성화 방안 연구(권오성 외) 2014.06) 이것은 현재,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의 성향이 음식의 맛과 더불어 일본 후쿠오카원전사고 이후, 식재료의 안전성에 예민해진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매스미디어(Mass Media)의 영향으로 고객의 선택에서 식당의 위생상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디어 인증 식당을 기점으로 주변식당들도 점차적으로 영업부진의 해법으로 지금의 식자재 구입을 루트를 지역농산물로의 전환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시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년에 1회씩의 인증식당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나가 미디어식당의 심사체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충남 로컬푸드 식당 미디어 인증사업이 정착하려면…….

현재, 충남 로컬푸드 식당 '미디어'로 선정되면 지원프로그램으로, 미디어인증 마크사용 및 상징등(제작비 50%지원)의 사용과 메뉴판 디자인 지원(제작비 50%지원)과 홍보지원으로 현수막제작(제작비 50%지원), 블로그 홍보(1회/년), 지역신문 정기적 신문칼럼 게재 지원, 지역방송국 계절별 제철음식 소개 참여)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신뢰도와 매출이 향상되고 있지만 이것은 지역별 맛집브랜

드나 모범음식점지원에 비해 지원하는 것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물질적인 지원이나 단기적 지원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로컬푸드 식당의 취지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지속적인 로컬푸드 식당 인증사업에 성패를 나눌 수 있다고 본다.

그 중에, 로컬푸드 식당의 문제 중 가장 큰 한가지는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액을 매출액의 30%로 축소하는 세법개정으로, 직거래 소농, 재래시장을 통한 무자료거래에 대한 부담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역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한 우회거래도 증빙자료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로컬푸드를 장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유통단계를 줄여 농산물의 판매가격을 낮추어 주는 것인데, 지금은 로컬푸드 식당에서 구입하는 지역농산물의 가격이 일반 유통농산물가격보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먼저, 농산물을 로컬푸드 식당에 납품하는 농부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로컬푸드 식당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농가홍보 및 저렴하게 공급 할 수 있는 농가와 품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역별로 시군 등의 행정기관을 통해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반드시, 충남 로컬푸드 식당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충남 로컬푸드 식당 미디어 인증사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충남도내 식당들과 일반인들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와 지원이라고 본다.

이 부분은 현재,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남도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끝으로 충남 로컬푸드 식당 인증제도를 단순히 식당 홍보나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인증마크의 한 가지로 보지 말고, 식당경영자는 내가하는 로컬푸드식당이 내 이웃이자 고객인 농부와 함께 나누며 공생공존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농부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자발적 로컬푸드 식당 투어를 만들어 진행하다.

현재, 충남 로컬푸드 식당 미디어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충남도·시·군청에서조차 잘 모르는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부터 내려오는 홍보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본인은 충남 로컬푸드 식당이 잘 운영되기 위해 무엇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 아니 할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실행하면서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는 충남 로컬푸드 미디어 식당을 벤치마킹하는 충



북유럽의 시민사회: 사회문제, 네트워크, 독립성

글 · 이관률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나는 2007년 즈음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연구를 해 왔다. 가끔 당신은 전공이 지역개발인데, 왜 시민사회를 연구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 때 마다 나는 “21세기의 지역발전은 시민사회가 얼마나 발전하였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한다. 20세기가 경제적 양적 성장을 추구했다면, 21세기는 사회적 질적 성장을 지역발전의 가치로 추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나에게 북유럽의 시민사회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2013년 12월 주어졌다. 나는 지난 겨울 핀란드, 스웨덴, 독일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2명의 시민사회 활동가, 5명의 공무원과 함께 7박 8일의 북유럽 연수를 가게 되었다.

남 로컬푸드 식당 미디어 투어’를 자비 재능 기부 형태로 만들어 지난 7월에 1차투어를 진행해서 일반인을 비롯해 외식업체와 농촌관련전문가들의 호응 속에서 벌써, 4차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투어가 진행되면서 미디어식당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식당경영주분들은 미디어식당에 걸 맞는 식당이 되기 위해 식당의 환경을 고쳐나가는 모습과 그런 식당에 직거래하며 서로가 이웃이 된 농부들의 모습을 대하게 된다.

이 투어는 미디어 인증식당들과 함께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충남 로컬푸드 식당 인증사업인 ‘미디어’를 알리고, 사람들이 직접 로컬푸드 인증된 미디어식당을 함께 찾아가 로컬푸드 식당의 운영과 직거래 농부와 농가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와 더불어 로컬푸드 상품을 구매하며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충남 로컬푸드 식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충남지역 농가와 더불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는 미디어식당경영인의 교육과 화합에 장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전문가의 자문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불황과 경기침체 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충남 로컬푸드 식당 ‘미디어’

충남 로컬푸드 식당 인증사업인 미디어식당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농가의 안정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배우려는 지역관련단체에게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충남 로컬푸드 식당 미디어가 불황기의 외식시장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창업자나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주고 있다.

나는 항상 북유럽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동경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그토록 고대하던 북유럽에 가보니, 그 곳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나에게 주변 사람들은 북유럽만큼 멋진 곳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아마도 그것은 북유럽을 언제 갔는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듯 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북유럽을 갈 기회가 있다면, 나처럼 겨울철에는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북유럽의 내면 곳곳을 보면서 북유럽은 분명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고, 그 곳은 우리나라 보다는 훨씬 앞선 선진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활성화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건강한 사회적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 북유럽의 시민사회를 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내가 본 북유럽 시민사회의 일편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 북유럽 시민사회의 역할과 특징

작년 겨울 우리는 북유럽의 시민사회단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일환으로 핀란드와 스웨덴, 그리고 독일의 관련기관을 인터뷰를 하였다. 그 중 여기서는 핀란드의 데모스 헬싱키(Demos Helsinki)와 스웨덴의 팀브로(Timbro)를 중심으로 북유럽의 시민사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일행 중 누군가가 “핀란드에는 시민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 질문을 받은 데모스 헬싱키 관계자는 당황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녀는 우리에게 “핀란드에는 몇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 “핀란드 국민 1명은 최소한 3개의 시민사회단체에 가입해 있다”고 답을 하였다.

그 대답을 듣고 나는 우리의 질문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질문이었는지 부끄럽기도 하였고, 도대체 시민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으면 몇 개인지도 알 수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우리가 한 질문과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을 통해서 북유럽의 시민사회와 우리 시민사회의 수준을 단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 핀란드의 데모스 헬싱키

우선 우리가 방문한 핀란드의 데모스 헬싱키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데모스 헬싱키는 정책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는 고민 속에서 2005년 설립되었고 현재 8명이 활동하고 있다. 데모스 헬싱키의 설립목적은 “미래에는 어떤 사회, 어떤 시스템이 좋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모스 헬싱키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법률적으로는 NGO이며, 운영은 각종 프로젝트 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데모스 헬싱키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사회단체라기 보다는 비영

리 민간연구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데모스 헬싱키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의 연구기금을 통해서 활동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 데모스 헬싱키가 공공부문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는 대도시권, 웰빙, 국가브랜드, 미래 등 매우 다양하고 폭 넓었다. 이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Sustainable Lifestyles 2050(2012)”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NGO, 대학이 협력하여 2050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미래연구이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모스 헬싱키는 중앙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데모스 헬싱키가 수행한 각종 활동은 공공부문과 시민사회 혹은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시키고 중재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데모스 헬싱키 전경]



[데모스 헬싱키에 대한 관계자 설명]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데모스 헬싱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양한 사회적 주체를 연결하는 것과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발굴해 사회적 논의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데모스 헬싱키의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고 시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부부문, 기업부문,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문제 발굴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데모스 헬싱키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한편 데모스 헬싱키는 주로 공공부문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기업과 협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 경우 데모스 헬싱키의 역할은 기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데모스 헬싱키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9개의 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2) 스웨덴의 팀브로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같이 좌우 갈등이 매우 심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스웨덴은 좌파가 다수이고, 우파가 소수라는 점이다. 팀브로는 정치적 성향과 당파성을 갖고 1978년 설립된 시민사회단체이고, 2003년에는 스웨덴 경영자총회(Free Enterprise Foundation)에서 지원하는 재단이 되었다. 현재 팀브로에는 약 20여명의 활동가가 근무하고 있다.

팀브로의 설립목적은 기업활동을 제고하는 것이고, 주요 주제는 시장경제, 자유기업활동, 개인의 자유, 그리고 열린사회 등이다. 그리고 팀브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회적 큰 흐름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팀브로의 주요 활동영역은 복지정책, 환경과 성장, 이민자 통합, 미디어 등이고, 매년 도서 15권, 리포터 2건, 세미나 100회 정도를 시행하고 있다. 팀브로는 출판, 언론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주로 외부네트워크를 통해 일을 수행하고 있고 팀브로는 주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팀브로를 방문하고 매우 놀란 점이 있었다. 그것은 2003년 경영자총회는 약 500억원을 팀브로에 제공했지만, 이 자금은 매년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팀브로가 10년 동안 사용할 자금을 일시에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경영자총회는 팀브로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재 경영자총회는 팀브로 이외에 3개의 단체를 더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팀브로 내부 모습]



[팀브로 인터뷰 이후 기념촬영]

팀브로의 활동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학생아카데미 활동이었다. 팀브로는 매년 25명의 청년을 선발해 인재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학생아카데미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주요 내용은 말하기와 글쓰기인데, 이 프로그램 안에는 6주간의 세미나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 논문을 작성해 합격을 하면 미국 워싱턴으로 졸업여행을 간다고 했다. 이러한 학생아카데미의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팀브로의 파트너를 양성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팀브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언론적, 학술적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팀브로는 매우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팀브로를 거점으로 새로운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팀브로의 관계자에 의하면, 팀브로를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스핀오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학생아카데미의 졸업생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팀브로는 자유주의진영과 시민사회를 중간으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팀브로는 좌우 통합의 역할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중도우파로 가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팀브로는 시장경제 강화라는 입장에서 젊은 층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3. 나오며

아주 짧은 일정과 1~2개의 시민사회단체 방문으로 북유럽의 시민사회를 이해하기는 무척 곤란하다. 단편적으로 북유럽의 시민사회를 보았지만, 분명한 것은 북유럽의 시민사회는 하나의 주체로서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북유럽의 시민사회를 보면서, ①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② 북유럽의 시민사회단체는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대학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주요 활동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협력네트워크에 의한 활동). 끝으로 ③ 북유럽의 시민사회단체는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재원을 지원받는 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시민사회단체의 독립성 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나는 가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러나 항상 듣는 답변은 “우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시민사회까지 고려할 수 없다. 앞으로 시민사회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라는 것이다. 분명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과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더 성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파성을 탈피해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발굴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단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먼저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을 주장하기 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여전히 21세기의 지역발전은 시민사회의 발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면 그곳은 행복한 지역이 아니다. 반대로 비록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민사회가 발전해 있다면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의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민사회를 분명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각종 정책거버넌스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도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사회문제와 시민참여의 장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시민사회단체가 문제 발굴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조사에 대한 연구비 혹은 인력을 지원하거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작년 북유럽의 시민사회 연수를 다녀오면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 보았다. 21세기의 지역발전은 시민사회의 발전이다.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공연구기관이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은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할까? 이 글을 계기로 충남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금강하구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언

글 ·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1. 서론

하구(河口, estuary)란 하천과 바다와의 접점으로서, 육지로부터 유출된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수역을 말하는데, 하천 내에서 조위의 영향을 받는 구간을 감조구간(tidal reach)이라 한다. 금강의 경우, 하구둑 건설이전에는 강경까지가 감조구간이었다고 한다.

하구는 하천유역에서 생산된 토사를 수송해 와서 해역으로 전달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도 하며, 하천수의 영향으로 해수의 염분농도가 낮아져서 하구역의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하구부의 흐름을 지배하는 요인은 구동력(驅動力)으로서의 하천류와 조석, 파(波)와 해빈류(海浜流), 장(場)의 경계로서의 지형, 그리고 하천수와 해수간의 밀도차이다. 특히, 육수와 해수의 염분이나 수온의 상이, 또는 부유물질의 농도분포 등에 기인하는 밀도차가 흐름의 구조, 특히 연직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하구부 수리현상의 특징이다.

하구역은 하천공학적으로도,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특이한 현상을 유지하는 공간인데, 하구둑은 해역과 하천역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물리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러한 복잡하고 특이한 하구역의 여러 가지 유형의 과정을 아주 단순한 과정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구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된 하구둑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논의가 세계적으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금강 하구둑에 대해서도 하구둑의 부분적인 개방 등과 하구역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하구둑에 저장된 수자원의 이용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은 부분적인 해수유통이라도 취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금강 하구둑을 중심으로 한 하구역의 실태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금강하구둑의 건설목적과 운영실태

금강하구둑은 1983년 11월~1988년 12월의 공사기간과 담수화과정을 거쳐 1994년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로 운영기간이 만20년이 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북측 도류제, 남측 도류제, 군장산단 서측 호안, 북방파제, 내항 투기장, 남방파제 등 대단히 많은 구조물이 금강 하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새만금 매립지도 바로 인근해역에 있어서 해안류 변화와 생태계 변화 등의 문제가 금강 하구역에서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금강 하구둑은 농업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서해의 조석을 차단하여 침수피해와 염해를 방지하지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건설된 것이다. 그 외에, 도로 및 철도를 통하여 육운을 개선하고, 호반을 조성함에 따라 수변공원과 철새도래지 등의 관광자원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강 하구둑은 충남과 전북의 2개도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서천, 부여의 6개 시군이 영향권내에 있으며, 몽리면적은 43,000ha(전북 35,786ha, 충남 7,214ha)이고, 연간 3억6500만톤(농업용수 2억4400만톤, 공업용수 1억2100만톤)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건설되었다. 2009년 현재 금강호에서 2억600만톤(농업용수 1억7800만톤, 공업용수 2800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3. 금강 하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1) 하구둑 주변의 토사퇴적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조사자료(서천군, 2008. 2)에 의하면 하국둑~군산 내항의 구간에서 8.4cm/년의 퇴적이 발생하고 있고, 군산 내항~장항항의 구간에서는 13.0cm/년의 퇴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본부의 자료(국토해양부, 2011. 12)에 의하면 개야수로에서 7.7cm/년, 하구둑~군산 내항의 구간에서 21.5cm/년, 군산 내항~장항항의 구간에서 8.5cm/년, 도류제 사이에서 20.2cm/년의 퇴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다량의 토사가 하구둑 내·외측에 퇴적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먼저 금강 하구 내·외측 토사의 퇴적으로 인하여 홍수예방 효과가 크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항만내의 수심저하로 말미암아 항구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준설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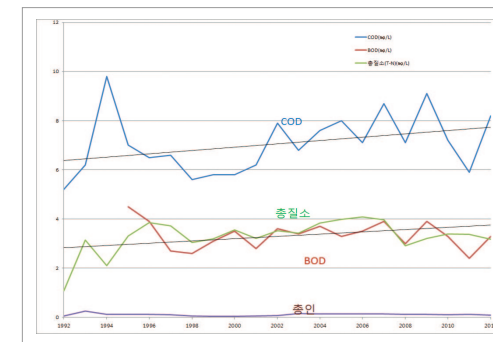
특히, 장항항은 1만톤급 2선석의 접안시설을 갖춘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퇴적된 토사 때문에 5천톤급의 선박만이 겨우 접안할 수 있는 정도로 항만의 기능이 축소되고 말았다. 이 외에도 어항의 경우 토사의 퇴적으로 기능을 거의 상실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또한, 금강호 내측에 토사퇴적도 심각한데, 이러한 토사퇴적이 지속될 경우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홍수 조절 기능이 약화될 것이 분명하며, 금강호에서 확보할 수 있는 용수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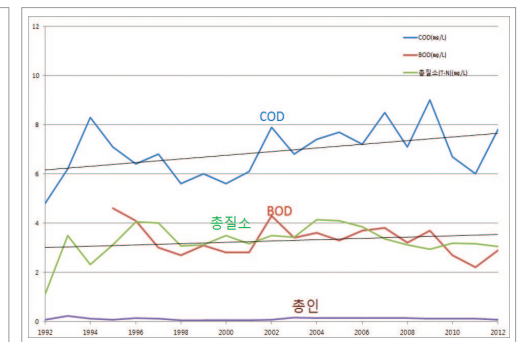
이러한 퇴적토사의 처리를 위해서는 준설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또 다른 환경오염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준설 이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금강호의 수질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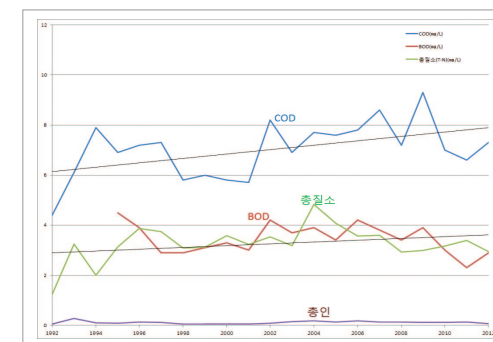
금강호의 수질은 대부분의 하구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질은 평균치보다 극치가 중요한데, 경향을 보여주기 위한 일반적인 자료로서 연간 평균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연간 평균치자료를 보면, 해당년의 강우량, 일조량 등에 따라 값의 진폭이 있으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평균적인 변화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총질소는 증가추세에 있다. <그림 1~그림 3>은 환경부가 측정한 금강 하구둑의 3개 지점에 대한 수질변화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 수질변화가 계속된다면 금강하구호의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한 수질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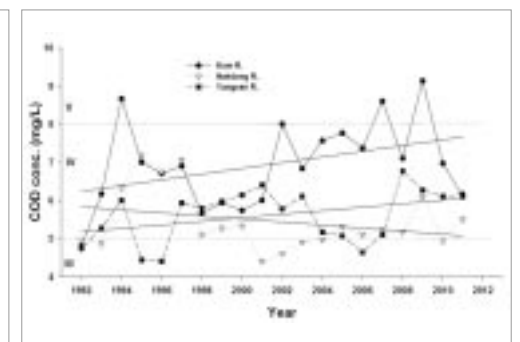
〈그림 1〉 금강하구둑 1 지점의 수질변화



〈그림 2〉 금강하구둑 2 지점의 수질변화



〈그림 3〉 금강하구둑 3 지점의 수질변화



〈그림 4〉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수질변화 추이

〈그림 4〉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하구호 수질의 변화추이(국토해양부, 2011. 12)를 비교한 것인데, 낙동강의 경우에는 COD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금강과 영산강의 경우에는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금강

은 영산강에 비해서도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강 하구호 수질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수산업의 붕괴

하구 내·외측의 토사퇴적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분석에 따르면 금강 하구호내의 토사퇴적은 연간 80만톤 정도이며, 금강 하구호에 유입되는 하천수의 수질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하구호내에 퇴적된 퇴적물(유기물)의 분해에 따른 수질의 지속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기수역의 파괴로 인하여 생태계 순환의 고리가 차단되고, 이로 인한 하구역 수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실뱀장어, 참게 등 회귀성 어종이 감소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과거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수산물 생산량은 연간 13.75%가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금강하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4.08% 감소하고 있는데(이창희 외, 2004), 이것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훼손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금강 하구역 관리상의 문제

현재 금강하구의 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하천관리), 해양수산부(연안관리),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 용수관리), 환경부(수질관리)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없고, 수질관리 및 퇴적층의 관리도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선박의 출항시에 도류제를 우회하여 운항해야 함에 따라서 운항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유류비도 증가하는 등의 점도 지역의 현안문제로 되어있다.

5) 기타의 문제

군장국가산업단지계획 중에서 갯벌보호를 위하여 장항국가산업단지계획을 철회하고,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으로 변경함에 따라 서천군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상실감을 가지게 되는 문제와, 군장 국가산업단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북방파제)의 건설과 이로 인한 해역의 지형변화(갯벌의 퇴적 가속화)도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이 외에도 군산 해상신도시 건설로 인한 하구역 균형발전에 대한 저항도 있으며, 북측도류제(유부도 부근) 해상풍력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변화도 서천군의 입장을 더욱 완고하게 하고 있다.

금강 나룻배 운영에 대한 의견차이도 있다. 금강 하구역 주변의 대부분의 지자체는 찬성하고 있으나 군산시는 반대의 입장에 있으며, 금강하구역에 관한 군산시와 서천군간의 공동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을 포함한 금강 하구역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없는 점도 금강 하구역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4. 금강 하구역의 환경개선방안

1) 금강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가. 홍수예방 및 담수이용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금강 하구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고조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담수 이용(연간 3.6억m³)의 지속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나. 기수역 회복을 통한 생태계 복원 및 연안어장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악화되고 있는 수질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용수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금강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2010년 현재 전북 80.8%, 충남 64.7%(2011 하수도통계, 환경부)로서 하수처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라. 철새도래지의 지속성확보와 신성리 갈대밭의 유지 및 복원도 중요한 과제이다.

마. 토사퇴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수질개선과 항구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2) 부분해수유통의 가능성

금강 하구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기수역을 회복하여 하구역의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구둑을 개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드시 담수이용의 지속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하구둑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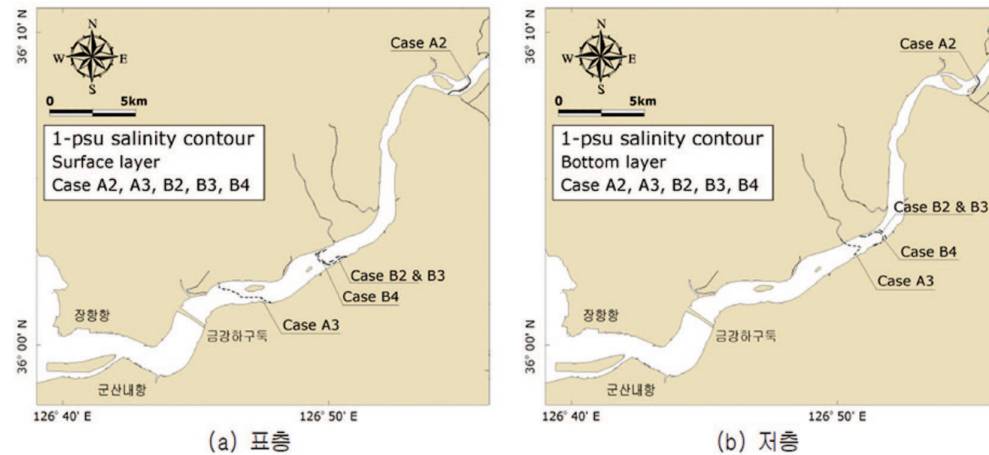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용수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구둑의 수문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여 부분적으로 해수를 유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Ⅲ)(2011. 12)」에서 부분적인 해수유통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서천군은 「금강하구 해수유통 염분확산 수치모형실험보고서(2013. 8)」에서 부분적인 해수유통에 관한 상세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표 1〉 해수유통에 관한 예측실험안(국토교통부, 2011)

구 분	실험안	해수유통	수문위치	개방 문수(면)	내용
군산측 수문 유지	A1 A1F	×	군산측	유출 20	담수 유출, 해수유통 없음
	A2	●		유출 20, 유입 20	상시 해수유통
	A3	△		유출 20, 유입 20	부분 해수유통
서천측 수문 중설	B1 B1F	×	군산측 서천측	유출 20 유출 10	담수 유출, 해수유통 없음
	B2	△	군산측 서천측	유출 20, 유입 5 유출 10	군산측 부분 해수유통
	B3	△	군산측 서천측	유출 20 유출 10, 유입 5	서천측 부분 해수유통
	B4	△	군산측 서천측	유출 20, 유입 5 유출 10, 유입 5	군산 및 서천측 부분 해수유통

※ × : 해수유통 없음, ● : 상시유통, △ : 부분유통, A1F, B1F : 홍수시 실험안



〈그림 5〉 수문의 개방에 따른 염분의 하도 내 유입 범위(국토부, 2011)

국토해양부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문의 개방정도에 따라 염수(바닷물)의 상류쪽 유입(소상)범위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며, 염수의 유입범위를 하구둑으로부터 상류 5km까지로 통제할 수 있다면, 군산취수장(공업용수), 화양취수장, 서포취수장 등 3개 정도의 정수장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그림 6〉 염수의 유입범위를 5km로 제한할 경우 영향을 받는 취수장의 위치

『금강하구 해수유통 염분확산 수치모형실험보고서(서천군, 2013. 8)』는 다양한 조건에 대한 수치모형 실험을 통하여 하구둑 상·하류의 수위차를 5cm정도로 유지하는 경우, 염수의 유입범위(염분 확산범위)

가 1.2km~5.4km정도로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물론, 수치모형실험이 갖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따라서 추가적인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

부분적인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과 기수역의 회복은 그 규모가 부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금강 하구역의 건강성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가 하구둑 건설의 표본으로 삼아온 네덜란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잔트크리크 하구둑(Zandkeek dam)은 1960년에 건설되었으나, 수질 등의 문제 때문에 하구둑의 중간부분에 터널형식(3m×5.5m)의 통로(culvert)를 설치(2002~2004)하여 해수의 교환을 시도하여 수질개선을 이루어 내고 있다(그림 7).



〈그림 7〉 잔트크리크 하구둑의 해수유통 터널(2004년)

3) 퇴적토사의 처리방안으로서의 배수갑문 증설의 필요성

금강 하구둑의 배수갑문은 30m×10.3m 규모의 20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홍수시 금강 하구호로 유입된 토사(sediment)가 배수갑문을 통하여 해역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배수갑문이 모두 좌안(군산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우안(서천쪽)에서는 토사의 퇴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다쪽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서천쪽의 바다에서는 누적된 퇴적토사가 육지화(陸地化)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바다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토사퇴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구둑의 우안(서천쪽)에도 배수갑문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강수의 국지화 및 대규모화가 가속되고 있어서 금강 하구둑 건설당시의 설계홍수량보다 큰 규모의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대청댐에서 PMF(가능최대홍수량)에 대비하여 보조여수로를 2014년에 완공함에 따라서 금강의 최대홍수량은 기존의 홍수량에 비

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홍수량 배제능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대규모의 퇴적토사와 증가된 홍수량에 대비하기 위한 배수갑문의 증설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림 8〉 퇴적토사와 배수갑문 증설의 필요성

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수리모형실험)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 4) 금강 하구둑은 염수유입을 막을 뿐 아니라, 고조나 해일 등을 막는 데 효과적이므로 하구둑의 운영은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 5) 우안(서천쪽)에 과도하게 퇴적된 퇴적토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안(서천쪽) 제방에 배수갑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6) 또한, 대청호 보조여수로의 완성에 따라 침수피해 등의 재해예방을 위해 금강 하구둑 배수갑문의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 7) 새만금은 금강하구역과 공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금강하구역은 새만금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8)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군산시, 서천군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사위원회(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이미 제안되어있다).
- 9) 가능하다면 새만금을 포함한 금강하구역의 광역발전방안을 양 지자체의 동의하에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각종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양 지자체의 협력관계를 손상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모색하면 양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10) 현재 금강하구의 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하천관리), 해양수산부(연안관리),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 용수관리), 환경부(수질관리)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없고, 수질관리 및 퇴적층의 관리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강하구역의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구역은 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있으므로, 총리실 등의 정부기관에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이창희 등,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I (KEI2004/RE-03/연구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2. 서천군, 금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금강하구 해수유통 방안 검토보고, 2008. 2
3. 국토해양부,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II), 2011. 12
4. 환경부, 2011 하수도통계, 2012
5. 서천군, 금강하구 해수유통 염분확산 수치모형실험보고서, 2013. 8

5. 금강 하구역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방안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을 종합하고, 금강 하구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금강 하구역의 문제는 수질의 악화, 심각한 생태계 훼손 및 지형변화(퇴적) 등이며, 이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문제 해결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간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공동발전의 목표를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
- 2) 용수의 지속적인 확보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금강에서 흐르는 물로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3.65억 m³/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 3) 금강 하구둑은 부분해수유통을 통하여 하구역의 생태계 복원 및 지형복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용수공급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행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분적인 해수유통의 방법으로서 하구둑 중간부분에 터널을 설치하고 하구둑 내·외간 수위차를 적절하게 유지하면 해수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암 마을’이라고 불리는 보령 갯배마을 이야기 - 문제점과 협력적 해결 방안 중심으로

글 · 신수연 녹색연합 활동가 (군 환경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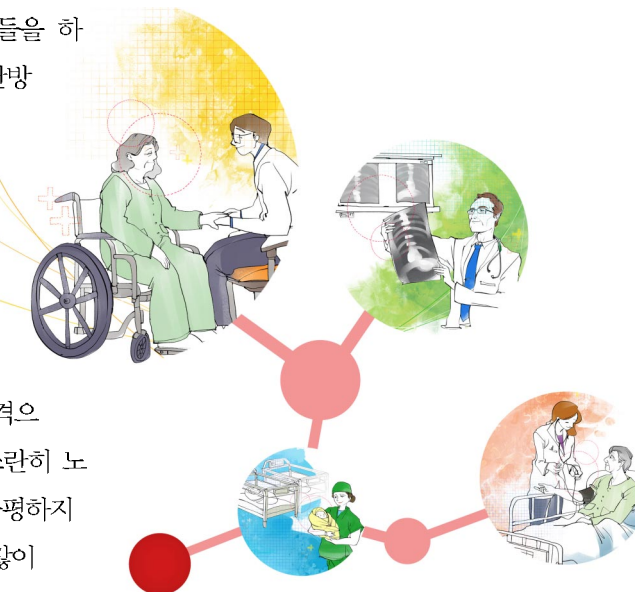
지난 5월 31일, 대천 해수욕장 옆 주차장에서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로 인한 암 희생자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 장소 한 켠에는 주민들이 바다에서 수거해온 녹슨 탄피가 한 무더기 쌓여있었고, 그동안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던 관련 연구 자료와 인터뷰 기사 등이 커다란 나무 패널에 전시되어 있었다. 지역 언론사 기자 한 명은 보령에 살면서도 ‘암 마을’로 불리는 갯배마을 상황에 대해 물렸다고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추모제에 참석한 주민들 사이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세찬 바람에 근조 화환 하나가 쓰러지자 잠시 술렁였지만 금세 조용해졌다. 옆에 앉은 주민 한 분은 갯배마을 문제가 MBC, SBS 등을 통해 전국 뉴스에 보도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어 그 때마다 기대를 걸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되는 게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주민 대표는 추념사를 통해 최근 10년간 갯배마을(30여 가구)과 삼현리(100여 가구)에서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79명, 현재 투병 중인 주민은 14명으로 공군사격장 인근 지역주민의 암 발병이 지나치게 높다고 관계 당국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철학자 벤야민은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절망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알면, 그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을 겪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진상 조사에 대한 요구는 당연하다. 보령 공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이 알려지면서 환경부, 국방부 등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연구소에서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9개월까지 조사 기관들은 토양·지하수 오염, 해양 오염, 소음 피해, 주민 건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 규모나 정밀성이 환경 피해를 입증할 만큼은 아니어서 대부분의 보고서는 조사 대상별 오염 현황, 환경 피해의 가능성, 추가 조사의 필요성 등을 언급 하는데 그치고 있다. 모든 환경 피해가 그렇듯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는 긴 시간과 큰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과 예산을 들여 조사를 한다고 해도 환경 피해의 직접 원인이 분명히 도출된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다. 하지만 보령 갯배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다방면의 오염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고, 민간 조사보고서에서도 정밀한 환경 평가와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결론(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0)내린 점, 피해 지역 주민들의 규모가 작고 전반적인 연령층이 고령인 점을 감안했을 때 조속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픈 것이 증거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보령시 신후동 산 253-1번지에 위치한 사격지원대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1962년부터 1980년까지 미 8군 사령부의 대공포 사격장으로 사용되다가 1981년 한국 육군으로 이관되었고, 1991년부터는 공군 방공포병사령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후동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70대 주민은 미군 주둔 시 폐유 무단방출로 인한 오염 사건 등 몇 가지 증언들을 하기도 하였다. 주한미군이 다량의 폐유를 무단방출해서 주변 지역이 오염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모른 채, 사격장 주변 갯가에서 일하던 주민들은 기름이 발견됐으며, 한국도 산유국이 되었다고 기뻐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전했다. 미군이 주둔할 때부터 한국 육군을 거쳐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까지 긴 시간 토양·지하수의 유류 오염, 사격으로 인한 소음, 탄피로 인한 해양 오염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는데, 또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불평하지 못한 채 꼭 참고 살아온 주민들이 이렇게나 많이 아픈데 이 아픔이 증거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증거냐고 그는 묻는다.



● 암 발생

갯배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 문제에 대해 지난 2010년 두 차례의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하나는 갯배마을에서 발생한 암환자와 거주자 정보를 통해 계산된 암 발생률을 일반인구의 암 발생률과 비교한

것이다. SBS 뉴스추적팀이 제공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갯배마을 주민들의 연령을 보정하여 주요 암의 기대발생수를 계산하였을 때 폐암의 발병률은 일반인구의 3배 이상, 위암과 간암 역시 약 5배 정도 높게 나왔다. 연구소는 갯배마을의 전입자, 전출자에 대한 정보가 없고 전체 모수가 매우 작은 집단이기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전제를 언급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갯배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추가적인 자료 조사, 지역 주민 및 관련자 인터뷰, 환경평가, 건강검진 등 다각적 방법을 이용한 주민건강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0)

다른 기관에서 진행한 주민건강영향조사의 경우, 공군사격지원대 내 유류고 주변 및 주변 마을에 대한 토양분석 결과 유류로 인한 오염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하수 분석 결과 유류 성분인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TCE(트리클로로에틸렌), MTBE(메틸-테르티-부틸에테르) 등이 검출된 것으로 볼

때 과거 장기간 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갯배마을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체내에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가 체내로 들어와 축적되어, 지속적으로 체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통한 DNA의 산화적 손상과 지질 과산화 등의 건강영향을 일으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서대학교 2010)

● 지하수 오염

갯배마을 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전인 1997년까지 지하수를 음용하고 관정이 폐쇄되기 전인 2003년까지 우물물을 허드렛물로 계속 사용해왔다. 갯배마을 민박집 5곳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3차례 진행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분석한 결과 2곳에서 PCE 성분이 우리나라 먹는 물 기준인 0.01mg/L의 2-3배를

초과하여 나타났다. PCE 성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과거에 드라이클리닝 용제 및 세척제로 사용되고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소, 2009)

수질검사 결과 드러난 MTBE 성분은 먹는물 가이드라인을 가장 엄격히 제시한 캘리포니아주의 가이드라인 값인 0.005mg/L와 비교 시 10배 이상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MTBE 물질의 경우 국제발암기구(IARC)에서는 일부 동물 발암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고 있다. 갯배마을 지하수는 기름(유기성분)으로 인한 오염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중금속 검사에서는 알루미늄, 비소, 납이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기준에 거의 가까운 농도로 검출되었다. 중금속 오염은 심각하지 않지만, 좀 더 여러 곳의 채수장을 통해 지하수를 검사하여야 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0)

● 해양 환경

공군 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도 주민들의 어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 사격 연습 중에는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기 어렵고, 생물 개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기도 하였으며, 병변 현상이 있는 정주성 어류가 자주 잡히면서 오염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갯배마을 주변 해양 지역의 수질과 퇴적물의 중금속, 화약물질(TNT, RDX)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해수의 일반 수질은 1차 조사(9월)가 2차 조사(10월)보다 높은 유기 오염을 보였으며 구리(Cu), 납(Pb) 및 비소(As)는 일부 정점에서 해역수질기준에 약간 초과하는 농도를 보였다. 퇴적물 서식지 기반으로 서식하는 고착성 생물 토굴의 체내에서 아연(Zn)과 구리(Cu)가 연안 생물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카드뮴(Cd)은 연체류 및 패류의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화약물질 RDX는 대조군, 실험군에서 모두 검출되었다. 보령 사격장 주변 해역뿐 아니라 대조군인 원산도 남쪽 해역까지 오염물질(중금속, 화약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해수 유동에 의해 보령 해역 탄두 분포 지역에서 원산도 인근 해역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해양 퇴적물과 생물 내 축적된 중금속, 화약물질의 기원과 이동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환경부, 2012)

보령 공군사격장 탄두 분포지역에 조사군 8개 정점을 선정하고, 사격장에서 불과 10km 떨어진 원산도 남쪽 해역에 대조군 2개 정점을 선정해서 진행한 환경부의 해양 환경 조사는 자체적으로도 대조군 선정이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소음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환경 분쟁 조정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처리된 환경 분쟁 조정 사건 3,045건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2,600건(8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되어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 사회에



서 소음 문제는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환경 분쟁의 소재이다. 대개 소음 문제는 공동 주택 내 층간 소음처럼 생활소음을 떠올리지만 그 뿐만이 아니다.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훌쩍 넘는 소음피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다. 바로 군(軍) 소음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십 년간 소음·진동에 노출된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전투기나 사격 연습으로 인한 소음은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른다고 입을 모은다. 난청, 스트레스, 수면장애는 물론 작업 능률 저하, 학습권 침해, 재산 피해(가축폐사, 건축물 파손 등) 등 군 소음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특히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대부분은 지속시간이 짧고 최대 음압의 크기가 110db 이상 발생하는 충격 소음이 대부분이다. 충격 소음은 지속 시간이 1초미만으로 짧지만 음압 크기가 다른 소음원에 비해 상당히 크고, 건물이나 창문 등을 흔드는 강한 진동을 유발한다.

갯배마을은 사격훈련일과 비사격훈련일의 소음, 사격훈련일의 사격훈련시의 비사격훈련일의 소음, 사격훈련일의 발칸포 사격과 스텔거미사일 사격 훈련시의 소음 등을 나누어 실내·실외 거리별 주거지, 최대·최소·등가 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공군사격장 인근 지역인 갯배마을은 환경소음기준에 따라 '가' 지역으로 분류되며 소음 기준은 50dBA인데, 사격훈련일의 경우 평균 57.3 dBA로 측정지역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2011)

사실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지역은 보령 갯배마을뿐 아니라 전국 군 사격장과 비행장 인근에 산재해있다. 피해 대상 주민만 70만 명에 달한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도 있다.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민들의 민원과 요구가 집산화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군 기지 소음문제를 특별법으로 풀어내려는 움직임은 20여 년 이상 지속되었지만 번번이 예산 문제로 법률 제정이 연기되었다. 군 자체적으로 야간비행을 제한하거나 비행경로 설정시 인구 밀집지역을 피하고 기총사격 횟수를 제한하는 등 소음 저감 대책을 세웠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협력적 해결방안의 모색

주민들은 2008년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주민 피해 상황을 알리고 오염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왔다.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조사는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에 힘입어 진행되었고 주민들과 시민단체, 민간 연구소 전문가들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인 충청남도에서도 지역 현안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 그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다.

지난 6월, 토양·지하수·해양·독성물질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그동안의 기관별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를테면 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샘플 수(N)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바다 생물체를 측정할 경우 표층·중간층·저층·뿔 등에서 생활하는 종을 구분해야 하는 것, 일부 보고서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신뢰도 판단이 어렵다는 점, 토양 오염물질의 정성/정량 분석 과정의 여러 오류들 등 향후 조사 방향과 방법, 데이터 분석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한 충남발전연구원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지난 7월 25일에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선행 보고서를 분석하고 자문의견을 낸 전문가들, 충청남도과 충남발전연구원, 보령시와 시의회 의원 등 관계된 사람들 50 여명이 모여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군(民官軍) 협의체 구성, 전문가 워크숍 내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 실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자료 축적 등이 논의되었다. 주민과 군(軍)의 갈등 사례 및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소개되었다.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과 공익법인 운영,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갯배마을 피해주민을 위한 긴급 의료비 지원이나 암 건강검진 제공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민·관·군 협의체 구성

'안보'를 이유로 한 국방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개개인이 그 상황을 감내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20여 년 전부터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집단화된 목소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 안보만큼이나 국민의 건강 역시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군 사격장·비행장 등 군사 시설로 인해 생명권, 주거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 국방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주민 피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대로 된 피해와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환경위원회가 제안한 개념 중에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다. 환경오염이나 공해의 원인을 발생시킨 기업이나 당사자가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의 가치를 위해 일부 국민에게 그 피해를 감내하라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위크숍 자리에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향후 해양 정밀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은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인 국방부가 참여하였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탄력이 붙었을 것이다. 현재 민관협의체 구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중인데, 국방부도 협의체 안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생각이다.

지자체의 역할

그동안 군사시설로 인한 오염 문제와 주민 피해에 대해 중앙 정부에 그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점점 지자체의 역할 비중이 커지고 있다. 주민의 대리자이자 주민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해당 문제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부평 캠프마켓 민관공동조사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부평 캠프마켓은 주한 미군기지로 오염 문제와 그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보통 주한 미군기지의 경우도 한국 군 기지로 인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그 해결을 요구하곤 한다.

하지만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주민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경우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11년 구성된 부평 캠프마켓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우 지자체, 지역구 의원, 시민단체,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유해물질 폐기 의혹이 제기된 캠프마켓 주변의 조사 방법과 범위, 시기 등을 논의하였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왔다. 또한 민관공동조사단 중심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발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오염문제를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보령시와 충청남도도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갯배마을의 피해 주민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다. 선행 조사의 오류와 문제점을 보완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논의 중인 민관협의체 안에 국방부와 환경부를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군 본부와 '사격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조례 제정이나 지역 발전기금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암 정밀 검진 등을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 민간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협력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한다면 현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테고, 군사 시설로 인한 다른 피해 지역의 문제 해결에도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보령시 갯배마을 주변 해양 환경조사(2011)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령시 공군사격장 주변마을 암 발생과 지하수, 토양 및 생물체의 유해물질 분석결과(2010)
환경부, 보령 공군사격장지연대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2012)
서울대, 공군 사격장 인근 갯배마을 환경소음평가결과(2011)

충남 in, 여성人



안정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한 프로젝트가 2기를 맞아 재정비에 들어간지도 3개월에 들어섰다. 1기를 시작하며 도민의 참여가 확대된 도민정상회의라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고 특히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산, 정책 등을 토론의 장을 통해 공유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으로 나아간 일은 지방자치에 주권자를 참여하도록 개방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 분권과 참여, 소통, 균형발전을 위한 재 점검을 통해 구체적 지표의 성과를 높일 시간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한 충남의 여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행복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상태를 객관적인 지표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발표된 것을 근거로 보려고 한다. 우선 행복의 수준은 한 국가의 경제수준을 나타내주는 총량지표의 향상과 함께 높아지는가이다. 물론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고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 수준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로 보면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평등한 조건을 전제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행복한 삶의 변화를 위한 필수적 장치가 더욱 견고하게 놓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충남의 여성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원하는

것의 실체는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가? 얼마 전 여성신문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4년간 180조원이었다. 사회적비용이란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포기하므로 발생한 사회적손실비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재원의 투자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즉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를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충남의 경우로 보면 불일치함을 볼 수 있다. 충남의 산업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더라도 1, 2, 3차 산업이 혼재되어 있고 여성의 경우도 각 단위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 전업농으로 종사할 수 없는 농사의 규모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욕구로 나타나고 지역의 산업구조 상 불일치로 인해 불안정한 저임금의 일용직 등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일어난다. 2차, 3차 산업의 경우도 지역에서 양성하는 여성인재를 머물게 할 흡인력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낮은 임금과 일시 취업의 형태를 수용할 고용시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이 얻는 경제적 편익과 모성활동을 위임하는 비용의 차이가 없거나 적을 경우 여성의 경력단절은 장기화된다. 지방, 고용시장의 미충족, 개인적 경제활동의 욕구 증대 등 서로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충남의 경우 행복한 변화의 중심에 여성을 세우고 여성이 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다. 경제의 총량이 아니라 불평등하지 않을 때 비로써 행복함을 느낀다는 전제가 인정된 상황에서 여성 또한 주체적 개인으로 불평등이 해소되는 정책은 중요하다. 여성의 일, 가정 양립 OECD 꼴지 수준이라는 결과는 사회가 여성의 사회적 욕구를 외면하거나 또는 진단의 편협함이 없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충남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충남의 대표 브랜드인 3농혁신이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불평등한 현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서북부권과 농공단지 등의 2,3차 산업 여성종사자들의 불평등을 해소할 충남의 해법은 무엇인지, 나아가 충남도민들의 상호 신뢰와 협동을 통해 충남여성의 일, 가정 양립의 환경을 만들어 내는 일은 역동적인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첫 걸음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에서 시도되고 있는 모든 제도와 정책에 충남인으로 살아가는 여성인을 고려하는 것은 가장 빠르고 성과있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을 단위로 분절시킴으로 구호에 그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많은 여성정책을 제 정책에 통합하여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충남의 내발적 힘을 만들어 내는 일은 성, 연령, 사회적 수준, 다문화의 수용성 등을 고려한 형평성있는 정책과 이를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시키는 과정을 차근 차근 진행시켜 가야한다. 이런 과정에 충남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길 기대해 본다.

식량안보와 전통주



정대영
우리술과 천연식초연구회장



쌀시장의 완전 개방이 눈앞에 왔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쌀 시장을 일부 개방하여 1994년부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은 쌀시장의 완전 개방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매년 2만 톤 정도씩 늘려가며 쌀을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법'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40만 톤 즉 국내 소비량의 9%에 이르는 쌀을 수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예조치도 금년으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완전 개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쌀 수입이 늘어난 데다 국내의 쌀 소비는 계속 줄어 쌀을 생산하는 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매년 1~2만ha 정도의 논이 사라진

다고 한다. 논이 밭이나 창고, 주택, 공장 등으로 한번 바뀌면 논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논이 줄어들면 쌀이 부족해도 쌀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

세계는 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2000년대에 들어 식량가격이 크게 오르고, 멀지 않은 미래에 식량의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는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곡물자급률이 사료용 포함 시 23%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이는 산악국가인 스위스, 사막지대에 위치한 이스라엘 보다 낮은 수준이다. 돈을 주고도 식량을 사기 어려운 심각한 식량위기가 오면 우리 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은 엄청날 것이다. 미래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

안보 즉 국민의 생존권 수호와 직결된다. 이를 위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량 비축의 확대와 해외의 식량 기지 확보 등 많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 중 우리 쌀의 소비를 늘려 논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대책이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은 그간 쌀 가공 식품에 대한 지원,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별 효과가 없어 지금까지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0년대 125kg 내외에서 2013년 67.2kg으로 줄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가 우리 쌀로 만든 우리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좋은 청주는 쌀 1kg에서 300~400ml 정도 나온다. 그리고 맛도 좋다. 수입 와인이나 일본 사케 대신 이런 청주를 한 병(750ml) 마시면 쌀 2kg 즉, 한 사람이 열흘 이상 먹을 쌀을 소비하는 것이 된다.

쌀이 부족하던 조선시대나 1960~70년대에는 쌀로 만든 술을 마시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쌀로 만든 술을 마시는 것은 쌀농사를 살리고 미래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일이 되었다. 평상시 우리 쌀로 술을 만들어 마시다가 심각한 식량위기가 오면 밥으로 먹으면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소주와 막걸리에는 우리 농산물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소주는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타피오카가 주로 사용되고, 막걸리도 수입산 쌀이나 밀가루 등으로 만든다. 지금의 싸구려 소주나 막걸리가 아닌 조금 비싸

더라도 우리 농산물로 만든 술을 마셔야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것이다.

충남에는 한산 소곡주, 면천 두견주 등 민속주와 함께 오랜 전통을 가진 양조장이 많이 있고 훌륭한 가양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집안들도 많다. 또한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 지원으로 <충남전통주아카데미>가 개설되어 전통주를 제대로 빚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통주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어 전통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여기에서 충남은 지리적으로 남한 중심부에 위치해 명품 양조장들이 고급술을 소량 생산하여 전국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유리한 지역이다. 또한 전국 소규모 양조장들이 충남지역에 협동조합이나 연합회 등을 구성해 공동판매,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도 편하다.

이와 같은 충남도의 지원과 전문가 노력, 지리적 이점 등이 잘 융합되면 충남은 전통주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

충남에서 만들어진 전통주가 국민의 사랑을 받아 조금씩 수입 와인과 일본 사케를 대체해 준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작으나마 미래의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길도 된다.

올 여름 도내 해수욕장 피서객 1221만 명

— 전년대비 13.2% 감소…물놀이 안전사고 ZERO 달성 등 성과

충남도는 올 여름철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13.2% 감소한 1221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9월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관광객 감소가 컸던 이유로는 피서객 방문이 가장 많은 8월초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이른 태풍으로 인한 기상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최근 4계절 캠핑 중심으로 휴가패턴이 변화한 점도 피서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처럼 올해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소폭 감소했으나, 도내 물놀이 안전사고 ZERO 목표를 달성한 점은 특기할 만한 성과로 기록됐다.

도는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 해양경찰서, 소방서, 적십자인명구조대, 해양구조협회 등 5개 기관과 함께 운영한 안전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안전관리통합지원센터는 총 3만 5801명의 인력을 투입해 순찰강화 등 안전사고 발생 사전예방 및 긴급구조 활동을 주야로 전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시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후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재정비 사업을 해수욕장 종합계획에 반영해 도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관세화 대비 농업직불금 제도 손본다

— 1일 제도개선 토론회…쌀 관세화 대비 전문가 의견 수렴

충남도는 9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농업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직불금 제도 개선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허승욱 도 정부부지사 주재로 자유토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농어촌을 위해 농업보조금 중 직불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충발연에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바 있다.

연구 결과 발표에서 강미야 충발연 연구원은 생산과 연계해 품목별로 지원하던 현재의 직불금을 농업, 환경, 농촌 등 3개축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1축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후세 인력육성을 위한 젊은 농부 프로그램인 희망농업 직불금 ▲2축은 농업생태·농촌경관보존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생태경관직불금이다.

이어 ▲3축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농촌공동체와 농촌안전망 프로그램인 행복농촌직불금으로, 현재의 직불금 제도를 농업·농촌의 다원성을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심포지엄·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농업직불금 제

도 개선에 관한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쌀 관세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가 직불금 제도개선안을 제언해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국가 과제로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다.

수도권 유망기업 3개사 내포신도시 유치

— 7개 기업과 MOU…5개 기업은 ‘수도권 이전 기업’

충남도가 수도권 규제완화 여파를 뚫고 수도권 유망 중소기업 5개사를 한꺼번에 유치했다.

이 중 3개 기업은 내포신도시에 새 터를 잡을 계획으로, 신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희정 지사는 8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이테크(주) 등 7개 기업 대표, 김석환 홍성군수 등 4개 시군 시장·군수 등과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한이테크와 화이브엠텍(주), 한양로보틱스(주) 등 3개사는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로, 내포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튼다.

우선 LED조명기구 생산업체인 한이테크는 오는 2016년 12월까지 125억 원을 투자, 내포신도시 산업용지 내 1만 6500㎡의 부지에 본사 및 공장을 이전 설립한다.

역시 LED조명기구 생산업체인 화이브엠텍도 2016년 12월까지 내포신도시 산업용지 내 1만 6500㎡의 부지에 본사 및 공장을 이전 설립키로 하고 모두 125억 원을 투자한다.

한양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로 2016년 12월까지 내포신도시 산업용지 내 9917㎡의 부지에 51억 원을 투자해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한다.

이들 기업의 고용인원은 모두 352명이며 이 중 225명은 신규 인력으로,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기업 유치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에 들어설 기업은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우수AMS(주)를 포함해 모두 4개로 늘어났으며, 내포신도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대지화학은 125억 원을 투자해 예산군 삼교읍 예산일반산업단지 내 2만 4061㎡의 부지에 내년 9월까지 본사 및 공장을 이전·설립한다.

수도권 내 기업인 대지화학은 원료 의약품 중간체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또 와이아이케이(주)는 2016년 12월까지 156억 원을 투자해 아산시 둔포면 아산제2테크노밸리 내 1만 1140㎡에 공장을 이전하고, JSPV(주)는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만 8369㎡에 내년 12월까지 338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세운다.

와이아이케이는 수도권에 위치한 반도체 웨이퍼 테스터 생산 업체이며, JSPV는 태양광모듈을 생산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반도체용 식각액과 박리액 등을 생산하는 램텍크놀로지(주)는 2017년 12월까지 772억 원을 투입, 공주시 탄천면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6만 1805㎡ 부지에 신규 공장을 설립한다.

이번 MOU에서 각 기업들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과 지역생산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등 사회적 책임 이행도 약속했다.

도는 이들 7개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 앞으로 3년간 도내에서 2250억 원의 생산유발과 162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3008억 원의 생산액과 834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 대표 맛집 정보’ 한 권에 다 있다

— 특색 음식점 176곳 선정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 발간

충남도가 도내 대표 맛집 정보를 추려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충남도는 8월 11일 도내 특색 음식점 정보를 담은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 책자를 발간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음식의 맛과 질, 시설, 실내·외 환경, 외국인 접객 능력, 주변 관광지 접근성 등을 고려해 각 시·군에서 선정한 176개 음식점의 정보를 담았다.

수록 내용은 음식점 내·외부 사진과 메뉴, 약도, 주차시설, 관광명소, 전화번호 등이며, 영어와 일어, 중국어를 함께 표기해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책자에는 이외에도 외국인 편의음식점 78곳, 모범음식점 906곳의 업소명과 소재지, 전화번호, 주메뉴 등을 부록형태로 제공해 도를 찾는 관광객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책자를 활용해 도내에서 열리는 프랜시스

코 교황 환영객 및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충남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세계 속에 알리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 책자를 전국 시·도 관광·식품 부서와 행정기관 민원실, 공기업, 관광안내소, 외국인 관련 단체, 위생단체 등에 배부해 활용토록 하고,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도 전자책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

김현규 도 복지보건국장은 “충남은 가는 곳마다 특색 있는 음식으로 여행객의 발길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다”면서 “이번 맛집 책자 발간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충남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각인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동마을 주형로 대표 초청 특강 가져



충남발전연구원
은 9월 1일 홍동
마을 지역센터 마
을활력소 주형로
공동대표를 초청
해 특강을 가졌다.

“신바람나는 농업농촌”을 주제로 그간 홍동마을의 변화와 발전 모습을 설명하며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제시해주었다.

지난 36년간 농약을 손에 안물히고 쌀농사를 짓고 있다는 주 대표의 말에서 친환경유기농법의 핵심적인 단면을 보았다. “농업농촌이 다시 살아갈 길은 바로 ‘협동’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90분 간의 유쾌한 특강은 마무리되었다.

문화의 날 “시네마토크”



충남발전연구원은 8월 29일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 상영회와 영화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시간에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김선아 공동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영화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길보라 감독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풀어간 이번 영화에 대해 “세상이 생각하는 부모님과 내가 항상 함께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다를 것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한다.

충남도 로컬푸드 인증식당 ‘미더유’ 제등식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은 7월 22일 올해 충남도 로컬푸드 인증식당인 ‘미더유’ 제등식을 가졌다.

이날 제등식을 가진 미더유 식당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숙성한우구이 전문점인 ‘우향이다’.

충발연 강현수 원장은 “믿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음식은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된 미더유 식당은 현재까지 총30곳으로 늘어났다.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충발연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관계자는 “오는 9월 미더유 통합 홈페이지를 오픈해 도내 미더유 식당 정보 및 예약 농산물직거래 장터 연계 관광지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미더유 활성화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의 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등식에는 충발연 강현수 원장, 미더유협의회 한상배 회장, 푸드컨셉연구소 박래휘 소장, 천안시 전병욱 부시장,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유학열 센터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원고모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에 관한 자유소재(정책제언, 충남여행)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열린마당」에 소개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www.cdi.re.kr



| 원고작성 | A4용지 4~5매, 휴면명조,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사진포함)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전화 (041)840-1123 팩스 (041)840-1129 E-mail : cdipr@cdi.re.kr

